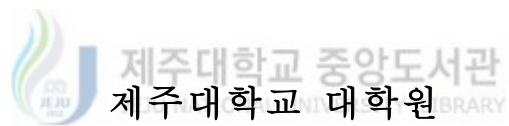


석사학위논문

제주4·3사건 초기 ‘무장대’의 조직과 활동
- 「제주도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의 분석-



사학과

장 윤 식

2005년 12월

제주4·3사건 초기 ‘무장대’의 조직과 활동

- 「제주도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의 분석-

지도교수 권 인 혁

장 윤 식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2월

장윤식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05년 12월

The organization and activity of 'Jejudo guerrillas' in
the early stage of the Jeju 4 · 3 Uprising

- Focusing on *The report on the struggle of Jejudo People's Guerrillas* -

Yoon-Sik Jang

(Supervised by Professor In-Hyuk Kwo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2005. 12.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기존 연구의 검토	3
3. 자료의 예비적 고찰	6
4.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II. 무장대의 조직	11
1. 조직배경	11
2. 조직개편 및 강화	19
3. 병력 및 무기	41
III. 무장대의 작전과 활동	44
1. 시기별 작전 및 활동일지	44
2. 주요활동	54
3. 초기 활동과 국방경비대와의 관계	60
IV. 결론	71
참고문헌	74

표 목 차

<표1> 「제주도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와 주한미육군사령부 일일정보보고의 비교(1948년)	7
<표2> 남로당제주도위원회 조직체계 비교	20
<표3> 무장대 관련 일지(1948. 3. 15~5. 10)	46
<표4> 지역별 활동 현황(1948. 3. 15~5. 10)	50
<표5> 무장대 관련 일지(1948. 5. 11~7. 9)	50
<표6> 지역별 활동 현황(1948. 5. 11~7. 9)	53
<표7> 국방경비대원 탈영 및 지원 일지	67
<표8> 무장대 면별 무기탈취 현황	70



그림 목 차

<그림1> 무장봉기 직전의 조직체계	23
<그림2> 제1차 조직정비 후 조직체계	25
<그림3> 제2차 조직정비 후 조직체계	28
<그림4> 제3차 조직정비 후 조직체계	30
<그림5> 제5차 조직정비 후 조직체계	33
<그림6> 대정면당사령부 조직체계	37

Abstract

‘The guerrilla forces(Mujangdae)’ made up one axis in the development of the Jeju 4·3 Uprising. This thesis tried to verify whether or not *The report on the struggle of Jejudo People’s Guerrillas*(hereafter, *The report*), which is regarded as the only data made by them, has historical values and to find out the organization and activity of the guerrillas in the early stage of the Jeju 4·3 Uprising(March 15 to July 24, 1948) based on the analysis of this report.

Analyzing this report, I tried to find answer to following questions. First, did it really exist the so-called ‘Jejudo Island Convention of South Korea Labor Party(hereafter, SKLP) on April 15’? Second, Did the guerrillas make efforts to have ‘anti-America struggle’ to what extent? Third, what’s the meaning of ‘May 10 separated elections’ for Jejudo islanders? Last, how was the relationship between guerrillas and Korea Constabulary?

As a result I could reliable *The report* to a lesser extent. Even though the organization of the guerrillas didn’t get preparations smoothly and went on slowly, they prepared ‘guerrilla operations’ as an armed guerrillas around March 15, 1948 before the armed uprising. In the phase of armed struggle, Jejudo Island’s headquarters of SKLP made frequent changes its organization in the early stage. Then, as guerrilla fighting was in the middle of progress, Jejudo committee military section of SKLP was strengthened considerably and the need of supply and political and military education was emerged.

In the early stage of struggle, the guerrillas focused its activity on “protection and defence of the organization and rejection of the May 10 separated elections and separated government.” In the end, the May 10 election was invalid in some areas of Jejudo Island.

From the results of the review, first, I could not make sure the exist

of ‘Jejudo Island Convention of SKLP on April 15’. It was not held or was a common meeting of the leadership. Second, it seemed that the guerrilla leaders made set policy in which they could not gain anything in case of preemptive attack against U.S. army. Third, a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report*, the rejection of the May 10 separated elections in Jejudo Island was not due to the threat or instigation of the guerrillas but due to Jejudo people’s choice to found the unified government. Fourth, the reason why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guerrillas and the Constabulary didn’t exist in the early stage was the tactics of the guerrilla leadership. In addition, the cells from SKLP who infiltrated into the Constabulary played some roles in doing ‘avoiding-confrontation’ tactics.



I. 서론

1. 문제제기

‘무장대’¹⁾는 제주4·3사건²⁾의 중심에 있었다. 2000년 1월 12일 제정 공포된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대한민국 정부의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이하 『진상조사보고서』)를 통해 제주4·

-
- 1) ‘무장대’를 일컫는 명칭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상호 적대적 관계인 토벌대 측에서는 ‘폭도(Raiders)’ 혹은 ‘공산폭도’, ‘공비’라는 명칭이 흔히 쓰였다. 이 명칭은 대부분의 군경자료에 쓰이고 있으며 미군정보고서에서도 자주 쓰인다.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동군사령관에 보낸 공문(1948.11.21)에는 “인민해방군(Peoples Liberation Army), 행동전위대(Action Vanguard Corps), 게릴라(Guerrillas)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고 적고 있다.(『제주4·3사건자료집 7, 미국자료편①』). 이 밖에 ‘반란군’, ‘인민민주군’(People’s Democratic Army)(「주한미군사」), ‘제주인민해방군’(『한국전쟁사 I-해방과 건군』)이란 명칭도 등장한다. 주민들 사이에 불렸던 명칭은 ‘산사람’, ‘산군’, ‘산쪽’ 등 가치중립적 명칭에서부터 ‘폭도’, ‘산폭도’, ‘공비’라는 명칭까지 다양하다. 공산주의 세력들이 스스로 일컬었던 명칭은 ‘유격대’와 더불어 ‘인민군’, ‘인민유격대’, ‘인민해방군’, ‘빨치산’, ‘인민자위대’ 등이 있고 무장봉기를 일으켰던 그들 내부에서는 ‘호(虎)부대’로 통했다. 또,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가 ‘무장대’, ‘무장유격대’(『4·3은 말한다』,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이다. 김봉현·김민주는 ‘인민무장자위대’, ‘무장대’, ‘제주도인민유격대’, ‘인민군’, ‘인민유격대’, ‘유격대’ 등의 명칭을 혼용하고 있는데, “제주4·3사건 당시의 무장부대는 ‘자위대’였으나 4월 15일 도당부대회 직후 ‘자위대’를 해체하고, 각 면(面)에서 열렬한 혁명정신과 전투경험의 소유자 30명씩을 선발하여 ‘인민유격대(속칭 인민군)’를 조직했다”고 밝혔다.(『제주도 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 김집근은 “육지부의 ‘야산대(野山隊)’와 제주도의 ‘자위대’가 같은 성격이며 이들 모두 ‘인민유격대’로 전환되었다”고 했다.(『韓國戰爭과 南勞黨戰略』) 무장봉기 주체들의 선전문에 ‘인민해방군’(『제주경찰사』)이란 명칭과 그들의 활동 기록에 ‘제주도인민유격대’라는 명칭도 존재하나, 본고에서는 보편적 용어로써 ‘무장대’라 칭하고자 한다. 다만 본 논문에서의 ‘무장대’라는 용어는 반드시 병기를 소지한 무장 세력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부대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했다.
- 2) ‘폭동’, ‘투쟁’, ‘소요’, ‘사건’, ‘봉기’, ‘항쟁’, ‘반란’, ‘사태’ 등 ‘제주4·3사건’을 개념 짓는 용어는 연구자 혹은 해석의 주체에 따라 달리하고 있다. 필자는 정부 문서인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2003)의 명칭을 좇아 ‘제주4·3사건’이라 표현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진상조사보고서』가 정의한 저항의 방법으로써 ‘무장봉기’라는 표현도 사용할 것이다.

3사건을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 정의했다.³⁾ 즉, 제주 4·3사건 당시 ‘무장대’와 ‘토벌대’라는 분명한 대립축이 존재했었고 그들의 충돌과정에 많은 주민이 희생되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무장대’는 제주 4·3사건의 전개과정에 한 축을 형성했다. 그렇다면 엄청난 제주도민의 희생을 가져온 사건의 ‘충돌 당사자’ 중 하나인 무장대가 어떻게 조직되고 활동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제주 4·3사건의 전개와 결과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제주도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⁴⁾(이하 「투쟁보고서」)라는 인용 자료가 등장한다. “무장대로부터 노획한 압수 문건 사본을 재구성하거나 사건을 보태지 아니하고 내용 그대로 공개”⁵⁾한 이 자료는 무장봉기 주체들에 의해 그들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의 유일한 사료이다. 하지만 『진상조사보고서』에서도 인용사례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자료의 공개 이후의 연구서에서도 좀처럼 인용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인용할 가치가 없는 사료인가? 필자는 이 의문에서 연구의 출발점을 삼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투쟁보고서」가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지 검토⁶⁾해 사료로써의 가치를 검증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무장

3) 제주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2003, 536쪽.

4) 이 보고서는 1949년 6월 7일 경찰특공대가 무장대사령관 이덕구를 사살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노획 문서이다. 전직 경찰관 문창송은 1995년 이 보고서 필사본을 엮어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묻혀진 4·3의 진상』이라는 책을 발간했다.(제주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 2003, 159쪽)

5) 문창송 편,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묻혀진 4·3의 진상』, 1995, 5쪽.

6) 필자가 사실기록 여부를 살피려는 이유는 ①1948년 8월 25일 북한의 해주에서 개최됐던 최고인민회의

봉기 초기 무장대의 조직과 활동을 파악하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김봉현·김민주가 주장하고 김점곤이 중앙당의 조정 노력이었다는 소위 ‘4·15도당부대회(島黨部大會)’는 과연 있었는가, 있었다면 어떠한 성격의 회합이었는가? 둘째, 많은 연구자들이 제주4·3사건 성격 중의 하나로 주장하는 ‘반미투쟁’을 무장대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담보하고 있었는가? 셋째, ‘5·10단선 거부’가 무장대(혹은 남로당)와 제주도민에게는 과연 어떠한 의미였나? 넷째, 제주4·3사건 초기 무장대와 국방경비대 간의 충돌이 없었는데, 이러한 진행과정과 경비대에 침투한 남로당 세포와의 관계 등을 검토할 것이다.

2. 기존 연구의 검토



제주4·3사건의 배경 및 전개 그리고 피해실태 등에 대한 연구는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되기 이전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접근하고 분석했다. 하지만 무장봉기를 일으킨 무장대를 중심에 둔 연구는 많지 않다.

『제주신문』이 1989년 4월 3일부터 연재를 시작한 「4·3의 증언」은 『제민일보』의 「4·3은 말한다」로 이어졌고, 이후 이를 엮어 제민일보 4·3취재반의 『4·3은 말한다』 1~5권을 발간했다. 이 자료는 많은 자료와

의 대의원선출을 위한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서 제주를 빠져나간 남로당제주도위원회 군사부책 김달삼 등이 투쟁보고를 하였고(高峻石, 『朝鮮 1945~1959:革命史의證言』, 1972, 251쪽), 활동보고 및 토론을 위해 마지막에 김달삼이 연단에 오르자 박수가 터졌다는 자료(김남식, 『南勞黨研究』, 둘째개, 345쪽)와 ②이 활동보고는 「투쟁보고서」를 토대로 했을 것이란 추측(「제주도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 8쪽) 때문이다. 즉, 당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회의에서의 보고라면 활동성과를 과시하고자 사실을 과장하고 왜곡할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검증은 하고자 한다. 또, 이 시기는 남로당과 북로당이 치열한 주도권 확보 경쟁의 시점이었다.

증언을 토대로 방대하고 치밀하게 기록되어 있어 제주4·3사건의 실체에 접근한 역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각 지역별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 본 연구의 무장대 활동일지를 검증하는데 주요 비교자료가 되었고, 제주도민과 무장대 간의 관계변화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⁷⁾

최근 비밀해제 된 주한미육군사령부(Headquarters of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HQ USAFIK) 일일정보보고(G-2 Periodic Report)와 주한미육군사령부 주간정보요약(HQ USAFIK G-2 Weekly Summary)은 제주도 상황을 각 방면에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보고하고 있다. 또 주한미육군 군정청(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FIK) 일반문서에는 장문의 「제주도남로당조사보고서」를 작성 보고⁸⁾하고 있다. 이 밖에 많은 미군정 자료들은 제주4·3사건 발발과 무장대의 역량이 집중되었던 시기에 실질적으로 남한을 통치했던 점령당국의 보고와 기록이라는 점에서 제주4·3사건의 전개상황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제주4·3연구소가 1990년부터 부정기적으로 발간한 『4·3長征』은 많은 증언 자료를 담고 있다. 특히 무장대에 편성되어 직접 활동했던 경험자의 증언은 본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⁹⁾

김봉현·김민주의 『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는 무장봉기에 직접 참여했던 저자들의 이력¹⁰⁾과 방대한 기록이라는 점, 제주4·3사건의 종결 이후 좌파적 관점에서 이를 최초로 기록한 점에 의미가 있다. 저자들은 제주4·3사건의 전술과 진행과정에서 부정적인 면이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7) 제민일보4·3취재반, 『4·3은 말한다』 1~5권, 전예원, 1994~1998.

8)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자료집 8, 미국자료편③』, 2003, 42~52쪽.

9) 제주4·3연구소, 「내가 겪은 4·3」, 『4·3長征 6』, 나라출판, 1993, 68~92쪽.

10) 공저자 김봉현은 한림면 금악리 출신으로 오현중 역사교사로 재직 중 민진 문화부장으로 활동하다가 4·3사건 발발 직전 일본으로 도피했다.(『진상조사보고서』, 167쪽) 김민주는 조천중학원생으로 재학 중 1948년 8월경 입산하여 활동하였다. 그는 1949년 검거되어 인천소년형무소를 수감 중 한국전쟁 당시 형무소가 개방되면서 인민군 편입, 포로, 석방, 일본 밀항의 과정을 거쳤다.(2004. 10. 16. 제주 로베로호텔, 필자 채록)

제주4·3사건을 ‘반미구국투쟁’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1948년 4월 15일 ‘도당 부대회(島黨部大會)’를 통해 최초 봉기 당시 ‘자위대’가 무장대로 개편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저서는 무장대와 제주도민을 동일시하고 그 역량을 과장되게 기술한 점, 애매한 시점과 편향적인 서술, 그리고 증언이나 사료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는 제주4·3사건에 대한 대부분의 후속 연구에서 인용되고 있다.¹¹⁾

이 밖에 김점곤은 ‘4·3폭동’이 남로당중앙당의 방침과는 다른 돌출적인 투쟁 형태이며, 무장투쟁으로 전환하면서 ‘무장대’가 5·10단선 저지를 주도했지만 역량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모하고 모험적인 투쟁이었다고 분석했다. 또, 김봉현·김민주의 저술을 바탕으로 1948년 소위 ‘4·15도당대회(島黨大會)’는 중앙당의 방침과는 달리 돌출적인 제주4·3사건의 상황을 조정하고 수습하려는 노력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무장대’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¹²⁾ 김남식은 무장대의 활동상황까지 서술하고 있으나 구체적이지 못하며, 근거로 삼는 사료가 제한적이다.¹³⁾

양한권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뒤 최초로 발생한 조직적인 반미무장투쟁으로 4·3의 성격을 규정짓고, 제주도민이 조선시대 말기부터 겪어야 했던 역사적 경험과 해방 이후 사회경제적 상황, 미군정의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제주4·3사건이 발발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무장대의 태동은 김봉현·김민주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¹⁴⁾

박명림은 미군정과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항하기 위한 자위적·방어적 저항이었던 4·3항쟁을 통일운동이면서 반미투쟁으로 규정하고 분단 8년사의 한 획을 긋는 분기점으로 파악했다. 그는 ‘4·15도당대회’의 성격을 ①4월 3일의 봉기를 도당수준에서 추진해주는 것, ②본격적인 무장투쟁 혹은

11) 김봉현·김민주, □□濟州島人民들의 4·3武裝鬪爭史□□, 文友社, 1963.

12) 김점곤, 『韓國戰爭과 南勞黨戰略』, 박영사, 1973.

13) 김남식, 『南勞黨研究』, 돌베개, 1984.

14) 양한권, 「제주도 4·3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1988.

유격투쟁으로 이행하기 위한 사전준비라고 파악했다.¹⁵⁾

양정심은 제주4·3사건의 주도세력을 남로당제주도위원회로 규정하여 분석하면서 그들의 무장투쟁전술도 다루고 있지만 구체적인 활동상황은 단편적 서술에 그치고 있다.¹⁶⁾

수년간의 자료조사와 증언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정부기관의 보고서인 『진상조사보고서』는 광범위하게 조사·수록된 피해실태에 비해 제주4·3사건의 주체인 무장대에 대해서는 세밀한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다.¹⁷⁾

3. 자료의 예비적 고찰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濟州道人民遊擊隊鬪爭報告書)」는 1949년 6월 7일 화북지서 경찰토벌대가 무장대 아지트를 급습해 무장대사령관 이덕구를 사살하면서 노획한 문서이다. 이 문서는 제주도경찰국에서 필사하여 과장급 간부들에게 배포되었고, 이후 필사본을 영인하여 편저자가 1995년 출간하였다.¹⁸⁾

이 「투쟁보고서」에는 무장봉기 직전인 1948년 3월 15일부터 7월 24일 사이의 상황을 기록하면서 크게 ①조직면(組織面) ②작전면(作戰面) ③투쟁면(鬪爭面) ④국경(國防警備隊)과의 관계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조직면에서는 병력과 무기 그리고 5차에 걸친 조직개편 상황을 상술하

15) 박명립, 「제주도4·3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88.

16) 양정심, 「제주4·3항쟁에 관한 연구-남로당 제주도위원회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

17)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2003.
『진상조사보고서』는 군·경과 무장대 관련 자료의 상대적 미흡은 구체적인 진상을 밝히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진상조사보고서』, 48쪽)

18) 문창송의 증언(당시 화북지서장, 2005. 11. 28. 필자 전화인터뷰)

고 있으며, 작전면에서는 6차에 걸친 작전의 개요를 요약하고 있다. 또, 투쟁면에서는 제주읍과 11개 면(애월, 한림, 대정, 안덕, 중문, 서귀, 표선, 남원, 성산, 구좌, 조천)에서의 활동내용을 일지로 작성했고 전과일람표(戰果一覽表)도 수록하고 있다. 국경과의 관계에서는 국경과 관계를 맺은 경위와 함께 김익렬-김달삼 간의 소위 '4·28회담'의 경과를 상술하고 있다. 또한 국경이 무장대에 준 도움과 피해에 대해서도 서술했다.

필자는 이 자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자료와의 비교검증을 시도했다. 검증방법으로는 「투쟁보고서」의 투쟁면 일지 내용과 주한미육군사령부 일일정보보고의 기록을 대비했다. 그에 따른 증언은 각주에 첨부하고, 장문의 설명은 필자가 재구성했다. 그리고 과장과 왜곡에 대한 지적과 분석도 곁들였다.

<표1> 「제주도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와 주한미육군사령부 일일정보보고의 비교(1948년)

시기	「투쟁보고서」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4.17	신촌리 반동 진장섭(=충청도 출신 한민당계 교원), 김문봉 급(及) 그의 처 외 3명 숙청. 김영아(교장) 부상(64쪽)	4월 17일 밤 폭도들이 ECPOA CHON (964-1155) 서북방 1마일 지점에 있는 SINCHOD(좌표 미상)를 공격해서 경찰 부친 1명과 민간인 부부를 살해했다. 이때 교사 1명도 공격을 받아 부상당했고, 다른 민간인 2명이 실종됐다.(No.813, 1948. 4. 20)
5.14	오후 1시 한림지서 습격. 적은 개19) 7명, 서청(西靑) 14명 계(計) 21명. 아부대는 60명 외 동명, 명월 자위대 30명 참가 합계 90명. <중략> 접전 2시간 후 지서 토치카까지 육박하였으나 때마침 적 기동대를 실은 차 1대가 오고 <중략> 협격 당하게 되어 퇴각(49쪽)	세 무리의 폭도들이 5월 14일 오후 1시 한림을 여러 방향에서 공격했으나 경찰과 경비대의 합동작전으로 격퇴되었다. 폭도 5명이 사살되었다. 이들 폭도들은 다음 날 오후 3시에 재차 한림을 공격하여 경찰 1명을 살해하고 주택에 몇 차례 불을 질렀다.(No. 836, 1948. 5. 17) ²⁰⁾
	오후 4시를 기하여 함덕지서를 습격하였다. 아부대 약 50명 <중략> 버스가 오자 객차(客車)로 오인해 발사를 하지 않다가, 차창으로 총구가 보임으로 수류탄을 던졌으나 맞지 않아서 결국 도주시키고 말았다. <중략> 지서장의 사체를 지서 내에 담아서 방화하였다.(67~69쪽)	5월 13일 자정 폭도 300명이 함덕리를 공격했다. 경찰 1명이 피살되고 5명이 실종되었으며 민간인 2명이 피살되었다. 지나가던 버스에 한 폭도가 수류탄을 투척해서 경찰 1명과 버스운전사가 부상당했다. 이 공격으로 지서가 완전히 불에 타 없어졌다. (No. 835, 1948. 5. 15)

「투쟁보고서」는 그 날 그 날의 활동을 요약 정리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비교적 세밀하게 작성된 경우도 있었다. <표1>은 주한미육군사령부의 일일정보보고와 「투쟁보고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몇 가지 사례이다. 이를 통해 「투쟁보고서」는 어느 정도 신뢰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모든 기록에 신뢰를 갖기는 어렵다. 일례로 5월 26일 ‘무릉리 전투’가 있었다는 「투쟁보고서」의 기록에는 “무장대 13명이 매복, 60명 가량이 분승한 적 기동대 차량을 기습하여 약 15분간 상호 교전을 벌였는데, 적 14명을 사살하고 11명을 부상시켰다”²¹⁾고 적고 있다. 그러나 제주4·3사건 당시 순직하거나 부상당한 경찰의 명단과 순직일이 적혀있는 『濟州警察史』에는 이 날 경찰이 희생되었다는 기록이 없을뿐더러, 대정면 무릉리 인근에서도 희생당하거나 부상당한 경찰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²²⁾

또, 상황을 기록한 날짜가 다른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가끔 나타난다. 서귀면(西歸面)은 이 기간 동안 5월 22일 단 하루만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조차도 날짜를 다르게 적고 있다.²³⁾ 이와 같이 「투쟁보고서」에는 날짜의 오기(誤記)와 더불어 날짜를 추정한 기록²⁴⁾이 적지 않게 드러난다. 날짜를 오기하고 추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다.

① 각 면당에서는 문건과 구두전달을 통한 상세보고와 대략적인 보고를

19) 당시 좌익 측에서는 경찰을 ‘검은개’, 군인을 ‘노랑개’로 불렀다.(강봉순, 1932년 생, 2004. 7. 29. 자택, 필자 채록 / 강천문, 1932년 생, 2004. 9. 13. 자택, 필자 채록)

20) 이에 관한 박동우(당시 한림 민예청 부위원장)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사실 그날 금약·명월 등 산 쪽에서 60명가량, 나머지 마을에서 40명가량 모였습니다. <중략> 세 갈래로 나누어 지서를 공격했는데, 얼마 뒤 동쪽으로 응원경찰대 트럭이 총을 쏘면서 달려오기에 겁이 나서 도망쳤지요.”(제민일보4·3취재반, 『4·3은 말한다』 3권, 37쪽, 재인용-필자가 재구성 함)

21) 문창송 편,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 앞의 책, 54쪽.

22) 제주도경찰국, 『濟州警察史』, 1990, 341~348쪽 참조.

23) 제민일보4·3취재반의 『4·3은 말한다』 3권(1995:69~72쪽), 주한미육군사령부 일일정보보고(No.845), 『西洪里誌 西洪爐』(1996:73쪽)의 기록과 마을 주민의 증언(고복순, 여, 1931년생, 2004. 2. 12. 자택, 4·3연주소 채록)은 모두 5월 25일 한 차례 습격이 있었고, 다음 날 또 마을을 습격하여 한 사람을 살해했다고 하고 있다.

24) 문창송 편,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 앞의 책, 39, 46, 55, 56, 61, 71쪽.

했고, 도당은 이를 토대로 정보를 수합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②정보 취합에 걸리는 기간이 길다. ③최소 1개월 단위로 작성되었다. ④1948년 8월 25일의 해주인민대표자 대의원선거를 위해 김달삼 등이 제주를 빠져나간 8월 2일²⁵⁾ 직전에 집중적으로 작성되었다.

필자는 ①과 ④의 경우가 혼합되어 「투쟁보고서」가 작성되었다고 추측한다. 매일 매일 정보가 취합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정보 취합에 며칠이 걸리든 1개월 단위로 ‘투쟁일지’를 작성하든 적어도 날짜의 오류는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투쟁보고서」 곳곳에 ‘○○일 경’, ‘○월 하순’ 등 날짜를 추정하는 표현이 종종 등장한다는 점도 이런 추측을 가능케 한다. 즉, 「투쟁보고서」는 무장대의 활동을 상세보고와 대략의 문건·구두보고를 통해 축적했다가, 김달삼 등이 해주인민대표자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제주를 빠져나가기 직전 집중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몇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투쟁보고서」는 ①제주4·3사건 이후 무장대 측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 ②무장대 활동관련 사료로서 현재까지 유일하다는 점 ③상당 부분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 신뢰성을 갖추었다는 점 등 사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4.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투쟁보고서」에 수록된 1948년 3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의 기간에 국한하여 무장대 활동을 살피려고 한다. 또한 분석의 범위도 이 시기의 작전, 조직 그리고 활동을 중심으로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준비상황

25) HQ USAFIK, G-2 Periodic Report(No. 907, 1948. 8. 10)

을 가능할 것이다.

필자가 이 시기를 주목하는 이유는 남로당제주도위원회가 무장봉기의 주요 목표로 내세운 “조직의 수호와 방어, 단선단정(單選單政) 반대 구국투쟁”²⁶⁾을 위한 활동이 집중되었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투쟁보고서」와 더불어 미군정자료, 관련 단행본 등을 참고로 서술할 것이다. 이 점에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제주4·3사건자료집1~11』(2003)은 중요한 자료로 활용됐다. 또한 연구주제의 특성상 당시 경험자들의 증언도 도움을 받고자 한다. 특히 활동 일지를 작성하는 데는 「투쟁보고서」에 기록된 일지의 검증과 누락된 활동사항의 보충을 위해 『4·3은 말한다』, 미군정자료 그리고 제주도 각 마을의 향토지를 참고할 것이다. 이 밖에 무장봉기 발발을 전후하여 뿌려졌던 뼈라도 활용하고자 한다.



26) 문창송 편,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 앞의 책, 17쪽.

II. 무장대의 조직

1. 조직 배경

1) 해방 후 제주도의 상황

갑작스럽게 찾아온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민중들에게 한껏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것은 일제의 폭압에서 벗어났다는 희열과 새로운 질서에 대한 기대였다. 이러한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며 적극적으로 민중에게 다가선 쪽은 좌익세력이었다. 그들은 ‘건국준비위원회’ 결성(1945년 8월 16일), ‘인민공화국’ 창건 선언(9월 6일) 등 발 빠르게 움직여 나갔다.

제주지역 상황도 남한의 사회상황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었다. 1945년 9월 10 건준 제주도준비위원회가 결성되고, 9월 22일 제주도인민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인민위원회는 9월 말경에 이르면 각 면·리 단위까지 구성된다. 12월 9일 조선공산당 제주도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곧이어 청년동맹, 부녀동맹 등의 대중조직들도 속속 결성된다.²⁷⁾

해방 당시에는 옳은 일이라는 생각에서 전부가 ‘건준’이나 ‘인민위원회’로 들어갔소. 이것을 우리의 정식 정부라고 생각했고, 합법정부라고 생각했지. 우리같이 일제에 협력했던 사람들은 인민위원회 들어주지도 않았소. 인민위원회야 (도민들에게) 전적으로 신임을 받았지.²⁸⁾

이렇듯 전폭적인 신뢰 속에 인민위원회는 대중과 결합하며 강력한 조직

27) 아라리연구원, 『제주민중항쟁 I』, 소나무, 1988, 122~123쪽.

28) 제주4·3연구소, 『이제사 말함수다』, 한울, 1989, 173~175쪽, 재인용.

으로 발전한다. 민중과 좌파의 자연스럽고 강력한 결합은 이후 제주도 상황이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이어졌다. 특히 정치적 명분에 있어 좌익민족운동세력의 민중적 기반에 커다란 타격을 가져왔던 ‘신탁통치논쟁’도 제주도 좌파의 민중적 지지 기반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신탁통치 논쟁 후에도 제주도는 여전히 인민위원회 장악 하에 있었다.²⁹⁾

이러한 제주도의 상황과 달리 1946년 들면서 남한사회는 대립국면에 들어선다. 그 핵심에는 미소공동위원회(이하 미소공위) 소집과 신탁통치 논란이 있었다. 좌파는 1946년 5월 이후 결렬된 미소공위가 머지않아 재개될 것으로 확신했고, 때문에 1947년 제28주년 3·1절 기념대회를 미소공위 재개를 위한 투쟁과 접목시켰다.³⁰⁾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3·1절 기념행사를 앞두고 조직 총동원령을 내렸다. 그리고 배후에서 행사 준비에 대해 조직적이고 세밀한 지침을 산하단체와 각 읍·면, 직장 세포들에게 시달렸다. 이 지침에는 미소공위 재개에 의한 임시정부 수립 등 정치현안 뿐만 아니라 경제문제, 사회문제, 지역문제 등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었다.³¹⁾

2) 1947년 3·1사건과 탄압국면

「투쟁보고서」는 제주4·3사건의 시발점을 1947년 ‘3·1사건’으로 삼고 있다.

제주도에 있어서 반동 경찰을 위시한 서청(西淸), 대청(大靑)의 작년 3·

29) 박명립, 「제주도4·3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88, 49~50쪽.

30) 김남식, 『남로당연구』, 돌베개, 1984, 276쪽.

31) 남로당제주도위원회, 『3·1운동 기념투쟁의 방침』, 1947. 2. (제주4·3연구소, □□제주항쟁□□ 창간호, 실천문화사, 1991, 162~163쪽) 참조.

1 및 3·10 투쟁 후의 잔인무도한 탄압으로 인한 인민의 무조건 대량 검거, 구타, 고문 등이 금년 1월의 신촌(新村)사건을 전후하여 고문치사 사건의 연발(조천지서에서 김용철 동무, 모슬포지서에서 양은하 동무)로써 인민토벌 학살 정책으로 발전 강화되자, 정치적으로 단선단정 반대, UN조위(朝委) 격퇴 투쟁과 연결되어 인민의 피 흘리는 투쟁을 징조(徵兆)하게 되었다.³²⁾

위의 상황전개를 설명함에 있어 「투쟁보고서」는 최소한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 ‘제주현대사의 분수령’³³⁾이 됐던 1947년의 ‘제28주년 3·1기념 제주도대회’는 사상 최대의 인파가 몰리면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 대회는 우도(牛島)에서도 별도로 개최³⁴⁾될 정도였다. 하지만 이 날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제주사회는 견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든다. 이 소용돌이는 어쩌면 예고되었는지 모른다.

미군정은 1947년 3·1대회를 바로 목전에 두고 육지³⁵⁾에서 파견한 응원경찰 100명을 제주도에 추가 배치했다.³⁶⁾ 그러나 3·1사건 이전 제주도 상황이 미군정과 경찰 그리고 3·1기념대회를 준비하던 ‘3·1기념투쟁 기념준비위원회’ 간에 집회허가 여부 및 집회장소의 문제를 놓고 사소한 갈등은 있었지만³⁷⁾, 응원대가 파견될 정도는 아니었다. 오히려 급박하고 긴장되기는 육지 상황³⁸⁾이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군정이 제주도에 기존 경찰병력의 1/3 수준³⁹⁾인 100명의 응원경찰을 파견한 것은 긴장을 부추긴 꼴이 되었고, 급기야 이들 응원경찰에 의해 3월 1일 제주경찰서 앞과 도립병원 앞에서 발포사건이 일어나 민심을 극도로 악화시켰다.

32) 문창송 편,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 앞의 책, 16쪽.

33)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102쪽.

34) 고성화, 『통일의 한길에서』, 창미디어, 2005, 75쪽.

35) 본 논문에서는 제주도(濟州島) 이외의 타 지방의 총칭으로 사용한다.

36) USAFIK 6th Infantry Division G-2 P.R.(No. 497, 1947. 2. 27)

37) 자세한 상황은 제민일보4·3취재반, 앞의 책 제1권, 1994, 260~262쪽 참조.

38) 서울에서는 우익세력 주도로 동대문운동장, 좌익세력은 남산에서 집회를 가져 이후 시위 과정에서 양측 군중간의 유혈충돌이 발생하여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39) 기존 제주의 경찰병력은 350명이었다.(USAFIK, 6th Infantry Division, 앞의 보고)

이 발포사건으로 제주도는 ‘조선에서 처음 보는 관공리의 총파업’⁴⁰⁾에 돌입했다. 관공서는 물론 학교, 공장이 파업에 돌입했고 심지어 일부 경찰지서 직원들까지 파업대열에 합류했다. 3·1발포에 항의하는 이 파업은 상점과 밭일, 바다일도 멈출 정도⁴¹⁾로 확산되며 미군정과 제주도민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육지에서 들어온 응원대는 파업주모자 및 가담자를 검거하면서 파업을 배후에서 주도⁴²⁾했던 남로당제주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제주도 좌파세력은 물론 일반 민중들을 탄압했다. 이에 쫓기던 일부 남로당원과 도민들이 일본이나 육지로 도피했다. 남로당제주도당은 일시 연락두절 상태에 빠지기도 했고, 일부 면당에서는 “진지고수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서 싸울 수 있는 일꾼들을 묶어 둘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제주도를 떠나 활동할 수 있는 동지들은 그 동지들의 의사에 따라 활동하기로 결정”⁴³⁾할 정도였다. 총파업 이후 서북청년단(이하 서청)의 횡포는 제주도민을 더욱 자극했다. 서청은 ‘경찰보다도 경찰력을 더 행사’⁴⁴⁾하는 테러와 만행의 집합체였다. 제주도민은 미군정의 무자비한 탄압정책과 폭력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구책이 필요했고 은신처가 필요했다.⁴⁵⁾

인민위원회 등에서 나타난 도민들의 자치 독립정부에의 참여와 기대, 교육운동에서 엿보이는 자주운동의 역량과 성과가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닥친 제주도민에게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구성한다는 미국의 방침과 UN결의는, 해방 이후 늘 품어왔던 자주적인 통일독립정부 수립이라는 지향점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었다. 이러한 내외적 조건 속에서 남로당은 1948년 1월, 남로당 조직책 피검⁴⁶⁾이라는 악재를 만나게 된다. 이

40) 조선통신사, 『朝鮮年鑑-1948年版』, 1947, 318쪽.

41) 고성화, 『통일의 한길에서』, 창미디어, 2005, 77쪽.

42) 남로당제주도위원회의 3·1기념대회 및 총파업 관련 투쟁방침은 『제주항쟁』(제주4·3연구소편, 1991) 161~208쪽 참조.

43) 고성화, 앞의 책, 77쪽, 86~87쪽.

44) 4·3관련자 재판 주심으로 2주 동안 제주에 머물렀던 서울지방심리원 양원일(梁元一) 판사의 발언. (『조선일보』, 1948. 6. 7)

45) 고창훈, 「4·3민중항쟁의 전개와 성격」, 『해방전후사의 인식4』, 한길사, 1989, 265쪽.

에 남로당제주도위원회는 조직보위와 탄압세력 응징 그리고 단독선거 저지를 위한 무장봉기를 준비하게 된다.

3) 남로당제주도위원회의 무장봉기 결정

경찰과 우익청년단의 탄압으로 무조건 대량검거·구타·고문 등이 이어지고, 신촌에서 남로당원이 대거 검거 되는 사태를 만나자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조직수호의 문제’가 당면과제로 떠올랐다.⁴⁷⁾ 이러한 남로당의 위기국면 속에 고문치사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⁴⁸⁾ ‘앉아서 죽느냐, 일어서 싸우느냐’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됐다.⁴⁹⁾ 여기에 남한의 정국상황과 맞물린 ‘단선단정 반대’, ‘UN조선위원회 격퇴 투쟁’과 연결되어 무장봉기의 분위기는 무르익었다.

3·1사건 즈음엔 아직 조직이 탄탄하지 못한 때라 개인적으로 도피했지요. 그러는 가운데 남로당 조직이 더욱 강화되기 시작했어요. 마을에는 5~6명의 세포가 있었는데 제일 위엔 남로당원, 그리고 그 아래에 세포책, 농민위원장, 민애청, 자위대, 부녀동맹 책임자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피생활이 길어지다 보니 점점 입산자도 많아지고 분위기는 차츰 봉기하자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잡혀서 맞아죽거나, 숨어 지내다 굶어죽을 바에는 차라리 싸우다 죽자는 게 대부분의 감정이었습니다. 또, 서북청년단에 잡히면 곧 죽을 판이니 조직에 든 사람이든 아니든, 진보적 청년들은 갈 곳이 없었지요. 양심적인 일반청년들도 마음은 산 쪽이지만 겁이 나 이 도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곧 봉기가 날판이었어요.⁵⁰⁾

이에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3월 15일 전남도당 ‘올구’⁵¹⁾가 참석한 가운데

46) HQ USAFIK, G-2 Periodic Report(No. 753, 1948. 2. 7). 「투쟁보고서」(16쪽)에서 언급한 ‘신촌사건’이다.

47) 문창송 편,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 앞의 책, 16쪽.

48) 『제주신보』(1948. 3. 12, 3. 16)

49) 『노력인민』(1948. 5. 25)

50) 강위옥(작고, 제주 월평)의 증언(제민일보4·3취재반, 앞의 책, 4권, 210쪽)

51) 상급 기관의 조직 지도원. 조직(organization)에서 유래한 약칭으로 ‘오르그’라고도 한다.

“첫째, 조직의 수호와 방어의 수단, 둘째, 단선단정 반대 구국투쟁의 방법”으로 무장봉기를 일으키기로 결정한다.⁵²⁾ 지도부는 악질경찰과 서청 등에게 단기간의 폭력적 형태를 통해 그들을 응징하고, 미군정 당국에 제주도민을 탄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려 했다. 여기에 ‘5·10단선 저지’라는 대중적이며 정치적인 명분⁵³⁾을 엮음으로써 이 결정은 폭발성을 지니게 되었다.

무장봉기 결정은 남로당제주도위원회의 독자적인 결정이었다. 「투쟁보고서」에도 그 정황은 상세히 적혀 있다. 즉, “4월 3일 제주읍을 공격하기 위해 9연대 세포를 통해 병력을 동원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중앙당에서 침투시킨 9연대 세포는 ‘중앙당의 지시가 아니면 따를 수 없다’고 하여 결국 4월 3일 제주읍 공략이 실패했다”고 적고 있다.⁵⁴⁾ 그렇지만 무장봉기의 결정은 남로당제주도당의 거당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이는 이후 투쟁국면에서 강력한 힘의 규합에 저해요인이 되었고, 남로당 활동가들의 이탈을 가속화시켜 일본이나 육

52) 문창송 편,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 앞의 책, 16~17쪽.

무장봉기 결정회의에 참석했던 한 인사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무장봉기가 결정된 것은 1948년 2월 그믐에서 3월 초 즈음의 일이다. 신촌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도당 책임자와 각 면당의 책임자 등 19명이 신촌의 한 민가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김달삼이 봉기 문제를 제기했다. 김달삼이 앞장선 것은 그의 성격이 급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강경파와 신중파가 갈렸다. 신중파는 7명인데, ‘우린 가진 것도 없는데, 더 지켜보자’고 했다. 강경파는 12명이다. 당시 중앙당의 지령은 없었고, 제주도 자체에서 결정한 것이다. ‘오르그’는 늘 왔으며, 김두봉의 집이 본거지였다. 김달삼은 20대의 나이이지만 조직부장이니까 실권을 장악했다. 그리고 장년파는 이미 정역살이를 하거나 피신한 상태였다. 안세훈, 오대진, 강규찬, 김택수 등 장년파는 이미 제주를 떠난 뒤였다. 그런데 우린 당초 악질 경찰과 서청을 공격대상으로 삼았지 경비대는 아니었다. 미군에게도 맞대응할 생각이 없었다. 미군에 대해 다소 감정이 있었지만 그들은 신중 무기가 많은데... 우리가 공격한 후 미군이 대응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우선 시위를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정도의 생각이었다. 장기전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김익렬(9연대장)과도 회담한 것이다. 아무튼 우리의 지식과 수준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가 정세 파악을 못하고 신중하지 못한 채 김달삼의 바람에 휩쓸린 것이다. 그러나 봉기가 결정된 후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니 ‘우리의 결정이 정당한 것 아닌가’하는 분위기였다. 김달삼은 ‘내가 군사총책을 맡겠다’며 날짜를 통보했다. 사건 발발 10일전쯤에 날짜가 결정됐다.”(李三龍, 당시 남로당 제주도당 정치위원, 2002. 7. 11. 증언, 『신상조사보고서』, 158쪽, 재인용)

53) ‘단선반대=통일’이야말로 봉기지도부에 있어 봉기의 정당성과 대중적 선전의 가장 좋은 명분임에 틀림없었다. 이는 4월 3일의 봉기 결정에 중요한 계기였다. 반미·반경·반서청의 소극적 저항과 함께 ‘선거인 등록 저지=단선저지=통일’이라는 적극적 지향이 봉기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이다. 미군정의 강화되는 탄압과 함께 아마도 이것이 봉기결행을 주장한 강경파가 승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명분이었다.(박명립, 「제주도4·3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88, 77쪽)

54) 문창송 편,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 앞의 책, 66~67쪽.

지부로의 도피나 일반 당원들의 이탈⁵⁵⁾을 초래했다.

하지만 봉기 지도부는 정세를 낙관하고 있었다. “경찰력만으로 무장대 진압은 불가능한 일이며 국방경비대는 중립적이면서도 오히려 무장대에 대하여 호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승만 무리가 의퇴할 곳은 미점령군 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미점령군이 우리 사업에 직접 간섭하게 된다면 그것은 크나큰 국제문제화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쉽지 않다”⁵⁶⁾는 판단이었다.

4) 무장봉기를 위한 준비

남로당에 의한 조직 동원의 경험은 1947년의 3·1절 기념집회와 총파업 국면에서 그 위력을 보였었다. 즉, 남로당은 「3·1운동 기념투쟁의 방침」을 통해 인민위원회, 민청(民靑), 부녀동맹 및 각 단체와 학교, 학생에게 준비위원회 조직과 동원을 지시했고⁵⁷⁾, 그 결과 3만이라는 사상초유의 인파를 모이게 하였다. 또한 경찰의 발포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총파업을 계획하면서 당내 투쟁조직으로 ‘3·1사건 투쟁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때 문서취급은 비합법 태세로 전환하며 특히 주의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같은 활동 속에서 “당 기관 활동의 강화를 위하여 ①당(黨)의 강철 같은 정치적·사상적 통일을 확립하고 ②당내 기회주의자, 영웅적 관료주의자를 척결하고 ③투쟁의 제일선에 용감히 나섬으로써 ④각종 기관 활동의 강화와 민활화를 확립하며 ⑤앞으로 오는 제2혁명단계의 투쟁에 능동적으로 나설 수 있는 행동태세를 준비할 것”을 주문하고 있었다.⁵⁸⁾ 하지만 조직 강화는 더디게 진행됐고 무장봉기를 위한 준비 또한 허술했다.

55) 『제주신보』(1947. 12. 22, 1948. 2. 22, 2. 24, 3. 12, 3. 30, 4. 12), 『현대일보』(1948. 1. 13)

56) 봉기 이후 군사부책 김달삼의 발언(이운방, 「4·3사건의 진상」, 제주4·3연구소, 『이제사 말함수다』, 한울, 1989, 221~222쪽)

57) 제주4·3연구소 편, 「3·1운동 기념투쟁의 방침」, 『제주항쟁』 창간호, 실천문화사, 1991, 161쪽.

58) 제주4·3연구소 편, 「남로당제주도위원회 각 면위원회 읍위 각 야체이카에 보내는 지시, 1947. 3. 7」, 『제주항쟁』 창간호, 실천문화사, 1991, 161쪽.

남로당제주도위원회는 1947년 가을, 조직을 개편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군사부를 설치했다.⁵⁹⁾ 그렇다고 이런 조직개편이 당장 무장투쟁으로의 전환 혹은 준비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1947년 3·1사건 직후 남로당 전 남도당부 지시에 따라 제주도 당부는 3·1사건 당시의 각급 선전행동대 활동을 기초로 각 면 당부 직속 자위대를 조직하도록 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고 「투쟁보고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장봉기를 위한 준비는 단기간에 집중됐다. “1948년 3월 15일부터 25일까지 투쟁에 필요한 200명 예정의 자위대를 조직하고, 보급과 무기준비, 선전사업 강화 등 책임을 분담해 준비하기로 했으나 약속된 준비기간을 넘긴 3월 28일에야 재차 회합을 가질 수 있었다.”⁶⁰⁾ 3월 28일 재회합 때에 이르러서야 유격대(遊擊隊=툽부대) 100명, 자위대(自衛隊=후속부대) 200명, 도군사위원회(島軍事委員會) 직속 특경대(特警隊) 20명 등 320명의 최초 봉기인원을 조직했다. 또한 남로당제주도위원회에서 조직적으로 파견한 국방경비대 9연대 프락치에 대한 지도문제와 활동방침에 대한 지침을 전라남도당부에 수차례 요청했으나 회답이 없어 독자적인 선을 통해 대정면당부(大靜面黨部)에서 지도할 정도였다.⁶¹⁾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무장투쟁을 위한 인위적인 준비기간은 짧을 수밖에 없었다. 99식 소총 27정과 권총 3정 등 준비된 무기 또한 열악했다. 기껏해야 ‘한수기곳’ 등지에서 죽창이나 철창을 준비⁶²⁾하는 등 사전준비 기간에 할 수 있었던 것은 ‘유격대 및 자위대의 조직’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봉기 지도부의 한 사람인 남로당제주도당 조직책 김양근의 발언은 봉기의 원인과 준비상황을 가늠케 한다.

59) 박명립, 「제주도4·3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88, 73쪽.

60) 문창송 편,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 앞의 책, 17쪽.

61) 앞의 책, 75쪽.

62) 제민일보4·3취재반, 『4·3은 말한다』 1권, 전예원, 1994, 589쪽.

기자=이번 제주도 4·3소란사건의 동기는 무엇인가.

김양근(金良根)=이번의 반란동기는 작년 4월 3일경 민간의 충돌을 발단으로 자연발생적으로 봉기된 제주도 인민의 항쟁이다. 이러한 인민항쟁은 외래 ×××의 침략을 받고 있는 세계 약소민족국가 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 그 현상의 하나가 바로 이번의 제주도 인민항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기자=전투준비는 언제부터인가.

김양근=조직적·계획적 항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투준비는 4·3사건 충돌 후부터였다.⁶³⁾

그런데 남로당 기관지 『노력인민』 제92호(1948년 5월 25일자)에는 “무장병력이 수천 명이고, 기관총에 대포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또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의 『한국전쟁사』 제1권(437쪽)에는 “인민해방군 500명이 일본군이 산중에 매몰한 무기로 무장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 사실이 아니다. 봉기 초기에는 단지 소량의 원시적인 무기가 있었을 따름이었다.



2. 조직개편 및 강화

1) 남로당제주도위원회의 조직체계

무장봉기 당시 남로당의 조직체계는 소개되는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다. 『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와 미군정자료에서 소개하는 남로당제주도위원회 조직을 살펴보자.

63) 김민성(金民星, 본명 김양근, 25세, 당시 남로당 제주도당부 조직부장 겸 작전참모장)이 체포된 이후 경향신문 기자와의 간담회 기사(『경향신문』, 1949. 6. 25)

<표2> 남로당제주도위원회 조직체계 비교

『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 ⁶⁴⁾	미군정자료 ⁶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당부’책임 : 안요검, 조몽구, 김유환, 강기찬, 김용관 ○ ‘도당 군사부’책임 : 김달삼(본명 이승진), 김대진, 이덕구 ○ 총무부 : 이좌구, 김두봉 ○ 조직부 : 이종우, 고철중, 김민생, 김양근 ○ 농민부 : 김완배 ○ 경리부 : 현복유 ○ 선전부 : 김은한, 김석환 ○ 보급부 : 김귀한 ○ 정보부 : 김대진 ○ 부인부 : 고진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김유환 ○ 부위원장 : 조몽구 ○ 간부부장 : 현두길(아래의 각 부장들을 조정하고 통제한다) ○ 조직부장 : 김달삼 ○ 선전부장 : 김용관 ○ 농민부장 : 이종우 ○ 노동부장 : 이종우 ○ 청년부장 : 김광진 ○ 여성부장 : 김금순 ○ 재정부장 : 김광진
○ 제주43사건 직후의 조직	○ 1948년 6월 20일 보고

<표2>의 미군정자료는 제주 주둔 미군사령관 브라운 대령의 명령에 따라, 제24군단 정보참모부 형거(R. Hunger) 상사가 “인민해방군과 지원단체인 자위대 조직원들과 접촉해 왔던 포로들로부터 얻은 정보로 작성, 1948년 6월 20일 보고”한 「제주도 남로당 조사보고서」이다. 형거 상사의 보고에는 “1948년 4월 초에 남로당군사부가 ‘구국투쟁위원회’로 개편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도 사령부에는 케(캡틴), 조직책, 군사부책이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이 ‘투쟁위원회’를 이루어 모든 결정을 하였다”는 무장대 출신의 증언⁶⁶⁾과 1949년 1월 13일 날짜로 뿌려진 호소문⁶⁷⁾에 ‘구좌면 투쟁위원회’라는 명칭이 등장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군사부만이 아니라 남로당제주도위원회 자체가 5·10단

64) 金奉鉉·金民柱, □□濟州島人民들의 4·3武裝鬪爭史□□, 文友社, 1963, 89쪽.

65) “Report on South Korean Labor Party, Cheju Do,” June 20, 1948, RG 338: Records of US Army Command(1942-), US Army Forces in Korea 1945-49, Entry No. 11071, Box No. 2, NARA, Washington, D. C.(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자료집 9 미국자료편③』, 2003, 44쪽, 재인용)

66) 제주4·3연구소, □□4·3長征□□ 6, 나라출판, 1993, 76쪽.

67) 제주도경찰국, 『제주경찰사』, 1990, 323쪽.

선 반대를 위한 ‘구국투쟁위원회’로 전환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 각 면당도 ‘투쟁위원회’ 체계로 전환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남로당이란 큰 틀은 남겼겠지만, 무장투쟁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그 역할은 점점 축소되었을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무장봉기 국면에서는 ‘제주도당군사부’인 도사령부(島司令部)가 강화되고 무장투쟁에 관한 모든 지휘를 담당하는 체제 변환을 이루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남로당의 각 도당(道黨)에서는 “1948년 2·7구국투쟁을 계기로 무장부대를 편성하게 되면서부터 ‘군사부’를 조직하여 통할케 하는 동시에 ‘특위(特委)’를 설치함으로써 당과 야산대(野山隊)의 수뇌가 정군일체(政軍一體)를 꾀하여 당 목표에 귀일(歸一)케 하기 위한 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시도”⁶⁸⁾하였다. 제주도당의 ‘구국투쟁위원회’ 또한 위의 ‘특위’와 같은 성격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투쟁보고서」에도 ‘투쟁위원회’로 개편된 조직체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그 편성은 위원장과 조직부, 선전부, 군사부, 보급부로 나뉘어져 <표2>의 두 자료들과는 사뭇 다르다.⁶⁹⁾ 우선 조직체계상의 부서 구성부터 서로 약간씩 다르다. 이 차이는 정보 수집의 시기·정보 제공자의 위상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약 4개월 남짓한 기간에 5차례 걸쳐 조직개편을 하는 긴박하고 특수한 상황에서 조직체계를 명확히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68) 김집근, 『韓國戰爭과 南勞黨戰略』, 박영사, 1973, 138쪽.

69) 「문창송 편,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 앞의 책, 16~26쪽.

2) 무장대의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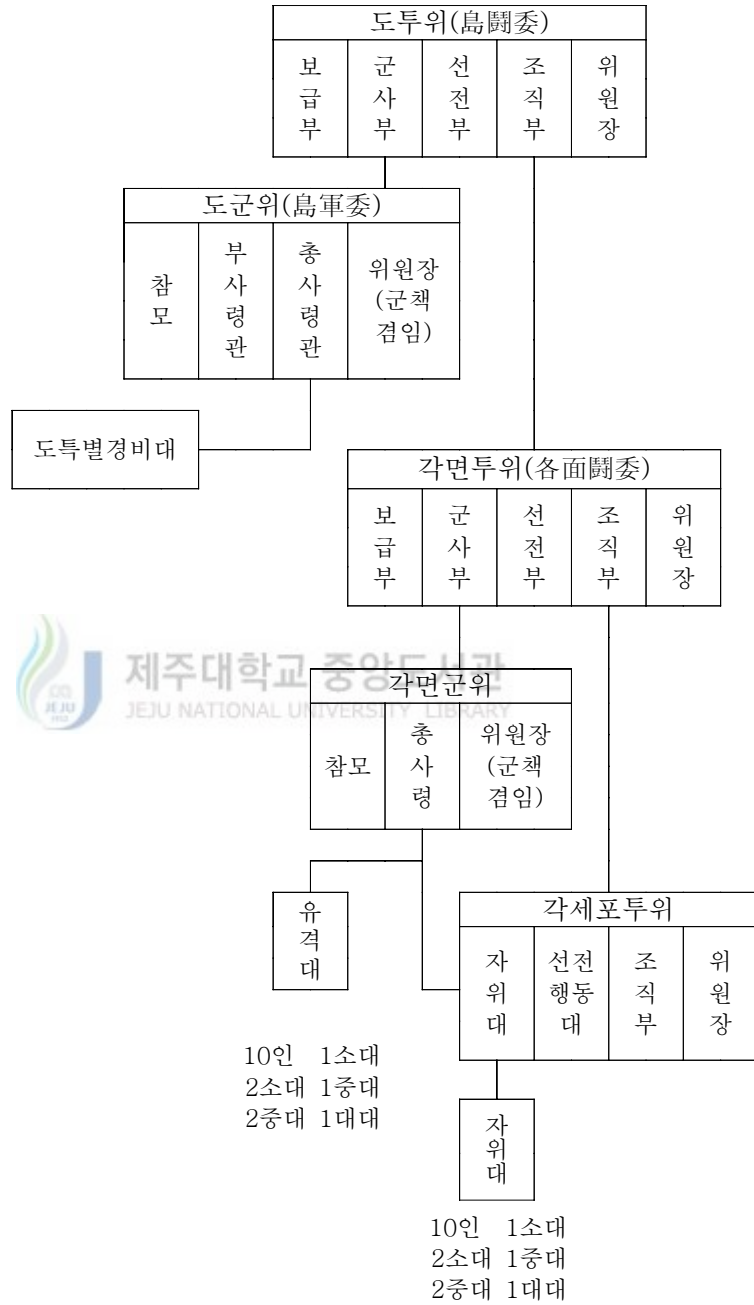
김봉현·김민주는 “1948년 2월에 각 읍면리별로 ‘인민자위대’ 조직을 완료하여 훈련을 하였고, 자위대로써 4월 3일의 무장봉기를 결행한 후 4월 15일 도당부대회를 통해 자위대를 해산하고 ‘인민유격대’로 개편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후속 연구에서 계속 인용되어왔다. 하지만 「투쟁보고서」에 따르면 1948년 3월 15일 전후로 남로당제주도위원회는 무장 조직으로서의 ‘유격대’와 후속부대로서 ‘자위대’를 동시에 준비한 것으로 나타난다.⁷⁰⁾ 실제 <그림1>의 무장봉기 이전 조직체계를 살펴보면 각 면 군위 산하에 자위대와는 별도로 유격대가 조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남로당은 4·3사건 이전 조직방침에 따라 제주도 13면 중 구좌, 성산, 서귀, 안덕, 추자 등 5면을 제외한 제주읍, 조천면, 애월면, 한림면, 대정면, 중문면, 남원면, 표선면 등 8개 면에 유격대를 조직하고, 도(島)에는 군위(軍委) 직속의 특별경비대를 편성했다.

4·3봉기 직전까지 유격대 조직이 안 된 구좌면, 성산면, 서귀면, 안덕면, 추자면 중 4월 3일 봉기 때 면내(面內) 지서가 피습된 곳은 성산지서(성산면)와 세화지서(구좌면)이다. 따라서 성산면과 구좌면은 급하게 유격대를 조직해 4월 3일 지서습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유격대가 미조직된 면에서 무장활동에 나선 최초의 시기는 서귀면 5월 22일, 안덕면 4월 10일이었다. 이들 면에서도 4·3봉기 이후 유격대를 조직한 것으로 보인다. 추자면을 제외한 이들 4개 면이 모두 6월 18일 이후의 조직정비에서 특무대원을 편성(성산면은 표선면과 같이 편성됨)하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이를 반증하고 있다.

70) 앞의 책, 1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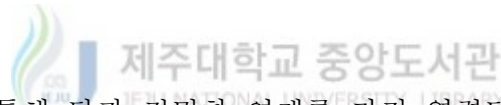
<그림1> 무장봉기 직전의 조직체계



그렇다고 4·3붕기 직전에 유격대가 조직된 제주읍, 조천면, 애월면, 한림면, 대정면, 중문면, 남원면, 표선면이 시종일관 활발한 활동을 했던 것은 아니다. 중문면, 표선면은 4월 3일 면내 지서습격이 없었으며, 특히 표선면은 5월 10일 가시리 선거사무소를 습격해 투표함 파괴하고 선거관리위원을 살해한 이후 무장활동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 서홍리와 동홍리를 습격해 주민 6명을 살해하고 1명을 부상시킨 서귀면도 7월까지 무장활동 기록이 없었다.

자위대에는 민애청⁷¹⁾ 소속의 남로당원들이 많이 편입됐으며, 1947년 총파업 이후 검거선봉을 피해 다녔던 청년들을 대거 흡수했다.

잡히면 죄가 있는지 없는지 가리고 때려야하는데 무조건 개 패듯 허는거라. 그런 세상이니, 사상이 있어서 입산한 것도 아니고 매 맞지 않으려고 입산한거지. 사상이 있는 사람은 항상 피해 다녔거든. 그러면 피해 다니는 사람끼리 또 만나게 되는 거지.⁷²⁾



위의 증언을 통해 당과 긴밀한 연계를 가진 열렬당원뿐만 아니라, 젊다는 이유로 탄압의 대상이 된 많은 제주도민들이 모여 무장대가 조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무장대는 4월 3일 일방적인 공격으로 최초에는 제주도의 치안력을 마비시키는 등 기세를 올렸으나, 무장조직은 여전히 미완성의 조직이었다. 게다가 응원대가 속속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남로당은 새로운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허술했던 준비과정과 준비상태를 두고 본다면 그것은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71) 민주애국청년동맹(民主愛國靑年同盟). 제주지역의 진보적 청년단체의 계보는 건준 청년동맹(1945.9) → 제주도청년동맹(1945.12) → 조선민주청년동맹 제주도위원회(1947.1) → 민애청 제주도위원회(1947.7)로 이어진다.(제주4·3연구소, 『4·3長征 5』, 1992, 26~2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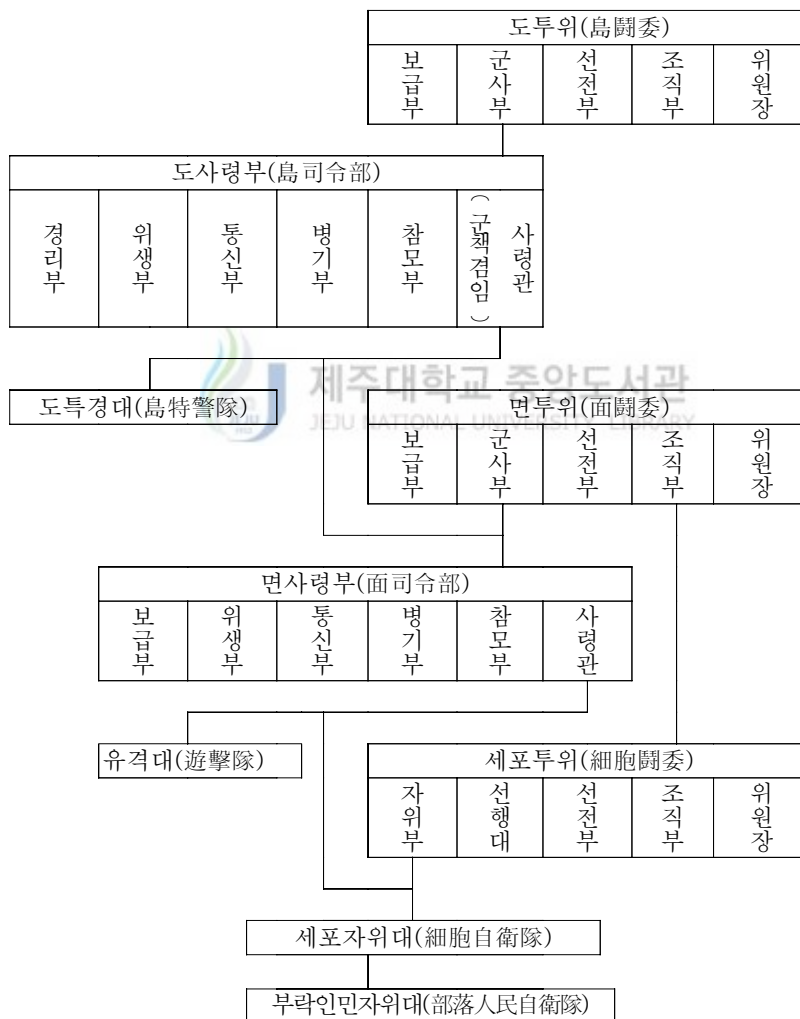
72) 제주4·3연구소, 「증언, 내가 겪은 4·3」, 『4·3長征 6』, 나라출판, 1993, 68~69쪽.

3) 조직개편 과정

(1) 제1차 조직개편

남로당은 4·3사건 발발 직후 조직정비의 필요에 의하여 <그림2>와 같은 조직체계 개편을 했다.

<그림2> 제1차 조직정비 후 조직체계



「투쟁보고서」는 위와 같은 조직정비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전 유격대를 250명으로 정리. 이것은 4·3투쟁 시 유격대(=툽부대)와 자위대(=후속부대)와의 공동작전의 결과, 투쟁 종료 후 다 같이 상산(上山)하여 공동생활을 하기 까닭에 일상생활 상의 혼란과 보급문제로 인해서 250명으로 정리 강화하여 나머지는 하산시켰음. 그러나 그후 재차 병력 확충의 필요성을 느껴 전원 400명 정도로 확충시켰음.⁷³⁾

필자는 이를 토대로 제1차 조직개편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① 본격적인 무장투쟁 태세 확립

봉기 직전의 체제는 ‘도군위(島軍委)’였다가 4·3봉기 직후 제1차 조직정비를 하면서 ‘도사령부’로 전환했다. 또한 각 면 투위(各面鬪委)의 군사위원회(군위)도 사령부로 바뀐다. 이로 미루어봤을 때 본격적인 무장투쟁에 돌입하며 강력한 지휘체계가 필요했고, 모든 유격활동의 지휘를 ‘도사령부(島司令部)’에서 관할하려는 포석이라 볼 수 있다.

② 사령부 조직부서의 세분화

봉기 이후에야 본격적인 무장투쟁을 위한 준비를 했다는 사실은 도사령부 및 면사령부의 부서세분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4·3봉기 직후 도당투위는 그 이전과 조직부서가 다르지 않으나, 도당 군사부 직할의 도사령부와 각 면 사령부는 조직부서를 세분화시켰다. 즉, 봉기 직전 위원장, 총사령(관), 참모로 구성됐던 단순한 형태의 각 군위(軍事委員會)가 4·3봉기 직후의 제1차 정비를 통해 도사령부는 참모부, 통신부와 더불어 병기 관리 및 확충을 위해 병기부를 두었고, 부상자의 속출에 따라 위생부를 신설하였다. 또한 도사령부에 경리부, 면사령부에 보급부를 둬으로써 장기전 태세를 갖추기 시작한 것이다.

73) 문창송 편,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 앞의 책, 20~21쪽.

③ ‘보급’의 필요성 대두

유격전이 본격화되면서 ‘보급’의 문제가 당면 문제로 부각되었던 것 같다. 도(島)사령부에 경리부⁷⁴⁾, 면(面)사령부에 보급부를 둔 것도 이 문제와 결부되었다. 위에서 밝힌 「투쟁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더욱 명확해 진다. 즉, “유격대와 자위대가 활동 후 같이 상산(上山)생활함으로써 보급문제가 대두되었다”는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2) 제2차 조직개편

5·10선거 직전에 착수하여 그 직후에 완료한 제2차 조직정비는 <그림 3>과 같은 조직체계상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 이유를 「투쟁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⁷⁵⁾

엄격한 규율과 치밀한 기밀 확보 그리고 신속한 행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 각면(各面) 투위 군사부 직속의 유격대를 도사령부 직속으로 편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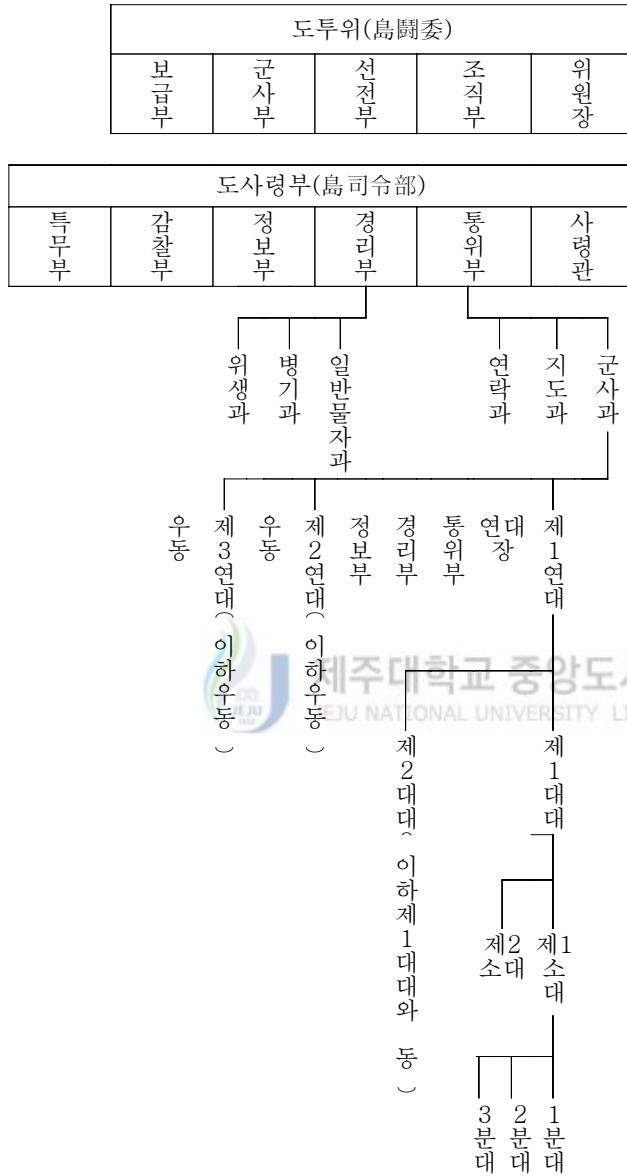
그 인원 구성은 1분대 3인, 3분대 1소대(10명), 2소대 1중대(23명), 2중대 1소대(49명), 2대대 1연대(110명)로 3개 연대를 이루었다. 여기에 특무부 20명 포함 모두 370명으로 유격대를 구성하고 사령부 각 부분에 배치하였다. 이때 특경대는 해체하였다.

<그림3>에서 보듯이 조직부서가 대폭 바뀌고 더욱 세분화된다. 이전의 참모부를 없애고 통위부를 신설해 군사과·지도과·연락과를 통할하도록 했다. 병기부, 위생부를 경리부 관할의 병기과, 위생과로 전환했고 일반물자과를 설치하여 경리부에 편입시켰다. 또 정보부, 감찰부, 특무부를 신설하였다. 이전의 통신부는 통위부의 연락과로 개편되었다.

74) 제2차 조직개편 시 경리부가 일반물자과, 병기과, 위생과를 관할하는 것으로 보아, 면사령부의 보급부와 같은 기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75) 문창송 편,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 앞의 책, 21~23쪽.

<그림3> 제2차 조직정비 후 조직체계



제2차 조직개편의 특징은 ‘지휘체계의 단순화’로 정리할 수 있다. 즉, 각 면 투위(鬪委) 군사부 직속의 유격대를 도사령부 직속으로 편성하여 도사령

부를 가일층 강화했다. 각 지역(面)의 무장대도 도사령부로 통합하여 3개 연대를 도사령부가 지휘하는 통합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이는 5·10단선 거부 투쟁 국면에서 주민들과의 긴밀한 관계가 필요했던 각 면사령부 산하 유격대 및 후속부대에 대해 지휘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혼선을 극복하고 장기전에 대한 대비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5·10단선 거부'라는 1차 목표가 부분적으로 달성된 이후 토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 체제 전환이라 볼 수 있다.

(3) 제3차 조직개편

5월 말일 단행된 제3차 조직정비의 이유와 변화된 조직체계는 다음과 같다.⁷⁶⁾

국경(國警)의 대량입도(약 4,000명)와 그의 포위 토벌전이 전개되자, 충돌 회피와 비합법 태세 강화의 필요상 인원을 대량 감소 정리하게 되었음. 370명의 인원을 240명으로 줄였다.

제3차 조직개편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다.

① 병력 감축

우선 눈에 띄는 것은 370명의 병력을 240명으로 감축시킨 것이다. 이는 「투쟁보고서」가 밝히고 있듯이 4천명 규모로 늘어난 국방경비대의 직접적인 토벌작전에 따른 것이었다. 일차적인 투쟁목표 달성을 기정사실화 하고 조직보위를 위해 무장대의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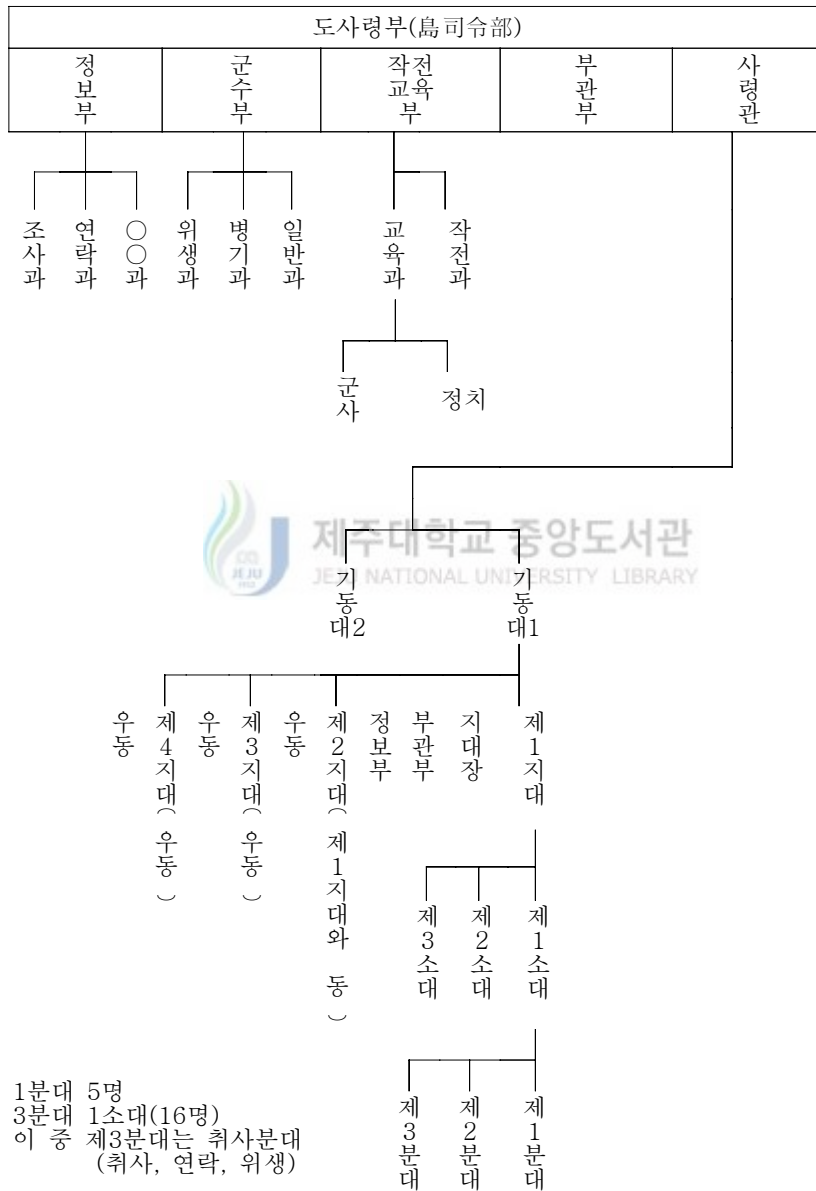
② 군사·정치교육의 강화

도사령부에 작전교육부와 군수부, 부관부가 신설되었다. 이전 체계상의 통위부를 부관부와 작전교육부로 분화시키면서 특히 교육과를 신설하여 정

76) 앞의 책, 23~24쪽.

치 및 군사교육을 담당하도록 했다. 비합법 태세에 따른 지침 및 유격전술에 대한 교육이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4> 제3차 조직정비 후 조직체계



③ ‘지대(支隊)’의 편성

이때부터 ‘지대(支隊)’라는 편성 단위가 처음 등장하며 4개의 지대로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4·3봉기 직후 제1지대~제3지대로 편성됐다”는 김봉현·김민주의 주장은 편성 시기와 규모에서 「투쟁보고서」와 다르다.

④ 서술상의 문제점

총 인원을 370명에서 240명으로 줄였다는데, 조직표상의 1, 2기동대를 합치면 최소 410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즉, 1소대 16명, 3소대 1지대(48명+지대장 1명, 부관부, 정보부=최소 51명), 4지대 1기동대(204명+기동대장 1=205명), 2기동대는 410명이다. 따라서 1기동대가 4개 지대를 관할했다는 <그림4>의 조직체계는 서술상의 오류로 보인다. 필자는 1기동대가 2개 지대를 관할하는 체계인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투쟁보고서」 작전면(作戰面)에도 “주력부대를 2그룹으로 편성”⁷⁷⁾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또, 나머지 35명은 도사령부의 부관부, 작전교육부, 군수부, 정보부에 분산 배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4) 제4차 조직개편

6월 18일 착수했다는 제4차 조직정비는 「투쟁보고서」 필사본의 한계(등사불명)로 ‘체계상의 정비’는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와 내용을 밝히고 있다.

새로운 투쟁에 대비하여 조직의 시급한 정비·강화가 긴요하여 정비했다.

1지대는 3소대로 편성되어 60명을 이루었다. 4개 지대 합쳐서 240명이고 도사령부 26명을 포함하여 266명이 편성됐다.⁷⁸⁾

77) 앞의 책, 32쪽.

78) 앞의 책, 25쪽.

6월 18일은 11연대 박진경연대장이 손선호 하사의 총격에 암살당한 날이다. 사료의 한계로 박진경연대장의 암살과 무장대 조직개편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힘들지만, ‘새로운 투쟁에 대비’하기 위해 조직정비를 하였으므로 커다란 상관관계는 없는 듯하다. 물론 제주도 주둔 국방경비대 총책임자의 암살이 커다란 사건이긴 하지만, 5월 22일 9연대 사병 43명이 탈영한 사건 즈음에서도 어떠한 조직정비가 없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무장대의 조직체계를 흔들 정도의 사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무장대 활동상황을 살펴봐도 이 기간에 뚜렷한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무장대의 숫자도 240명에서 266명으로 소폭 늘린 것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이 조직개편 기간이 7월 15일 정비완료 한 제5차 조직정비 기간과 맞물려 있다는 점도 작전상의 새로운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5) 제5차 조직개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6월 18일 착수하여 7월 15일 정비 완료했다는 제5차 조직개편은 「투쟁 보고서」에 수록된 조직개편으로서는 마지막 개편이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과 조직체계를 소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⁷⁹⁾

6월 18일부터 착수하여 7월 15일 완료했다.

이 시기(7월 15일 현재) 당면 조직문제는 ①강력한 당의 정치적 지도 통제 ②엄격한 규율 확립 ③치밀한 기밀 보장 ④행동의 신속화 ⑤신축성과 기동성 보유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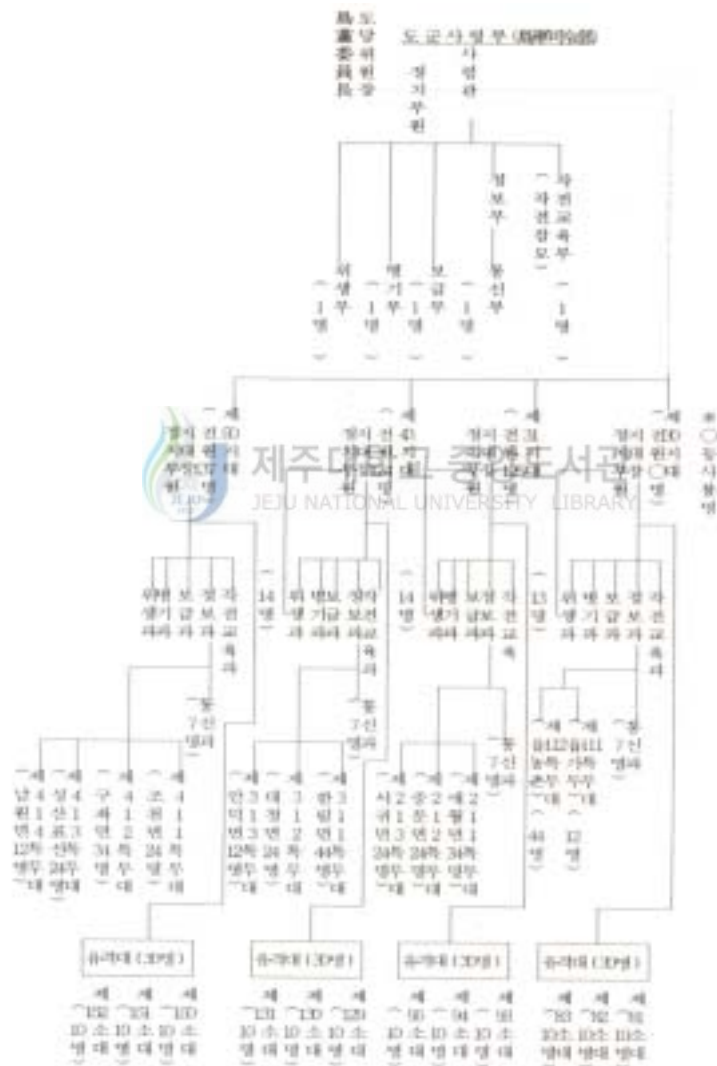
또, 소속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각급 정치부원은 상급 정치원 소속, 최상급 정치부원은 도당책(島黨責) 소속임 ② 특무대는 지대(支隊) 정보과 소속이며 그 임무는 정보수집, 개인 테러, 군(軍) 활동에 호응 보급의 원조이다. 그 조직은 각 면(面)에 특무대장 1명과 연락원 수 명을 두며, 그 외 3인 1분대, 10명 1소대로 하고, 1개 부락에 1~2인 정도로 조

79) 앞의 책, 25~29쪽.

직하는데, 특무대원은 세포로부터 제외함. ③ 사령부 및 지대를 사령관(지대장)과 정치부원과 작전참모(=作戰教育課責)의 3인으로써 최고 지도부를 구성함. ④ 각 지대 특무대는 각면 각 부락에 주둔하되 지대 지도부, 통신대, 각 유격대 소대는 지대 지도부 중심으로 밀집 생활함.

<그림5> 제5차 조직정비 후 조직체계⁸⁰⁾



80) 앞의 책, 26쪽 그림을 복사하여 수록함.

제5차 개편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특무대의 신설

이 시기 가장 눈에 띄는 조직체계상의 변화는 각 면별로 특무대를 신설한 것이다. 그 대신 자위대가 조직체계상에 사라지는 것으로 봐서 특무대는 자위대의 임무를 이어 받은 것이며, 이 때 특무대의 임무는 단순한 보급이나 연락만이 아니라 ‘지하선거’를 독려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② 병력의 급증

자위대 격인 특무대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병력이 501 명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시기 활동상황을 살펴봐도 병력 증강을 꾀할 만큼 전투나 습격이 빈번했던 것도 아니다. 오히려 전투나 습격이 거의 없는 소강상태였다. 작전면(作戰面)에 수록된 조직 강화나 정치교육·규율 강화도 이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것은 늘 이유가 났었다.

이때의 병력 증강은 해주인민대표자대회를 위한 ‘지하선거’에서 이유를 찾아야 한다. 즉, 각 면에 특무대를 증강하여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였다. 지하선거는 주민과 밀착하여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투부대인 무장대의 증강보다, 마을을 근거지로 삼는 특무대의 급증으로 나타난 것이다.

③ 지대(支隊) 편성 상황

김봉현·김민주는 4·3분기 직후에 다음과 같이 지대(支隊)가 편성되었다고 주장했다.

- 제1연대(3·1지대) : 제주읍, 조천면, 구좌면
- 제2연대(2·7지대) : 애월면, 한림면, 대정면, 안덕면, 중문면
- 제3연대(4·3지대) : 서귀면, 남원면, 성산면, 표선면⁸¹⁾

81) 김봉현·김민주, □□濟州島人民들의 4·3武裝鬪爭史□□, 文友社, 1963, 88쪽.

하지만 무장대는 5·10선거 전후에 3개 연대로 구성하는 조직개편을 했으나 그때는 지대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 또, 5월 말일의 제3차 개편 때부터 7월 15일 완료한 제5차 개편 때까지 무장대의 조직체계는 4개 지대가 항상 편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대별 소속 면(面)도 위의 주장과 다름을 알 수 있다. 「투쟁보고서」가 밝힌 지대와 그 소속 면은 다음과 같다.

제30지대(第三〇支隊) : 제주읍

제31지대(第三一支隊) : 애월면, 중문면, 서귀면

제43지대(第四三支隊) : 한림면, 대정면, 안덕면

제50지대(第五〇支隊) : 조천면, 구좌면, 성산면, 표선면, 남원면⁸²⁾

여기에서 지대 명칭을 일컫는 숫자 중 제30은 1947년 3·1사건 이후 민관총파업을 시작했던 3월 10일, 제31은 1947년 3·1 기념집회, 제43은 4·3 봉기, 제50은 5·10 단선거부투쟁을 기리는 숫자로 보인다.

그렇다면 무장대의 4월 10일 포고문에서 밝힌 ‘인민해방군 제5연대(人民解放軍 第五聯隊)⁸³⁾의 정체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지만 필자는 무장대 측이 세력과시를 위한 방편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새로운 자료와 증언에 의해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6) 무장대의 제주4·3사건 초기 조직개편의 특징

이상에서 살펴 본 제주4·3사건 초기 무장대 조직정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껏 알려진 무장봉기 이후에야 ‘유격대’를 꾸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남로당은 3월 15일 전후로 무장부대로서 ‘유격대’와 후속부대

82) 문창송 편,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 앞의 책, 26쪽.

83) 박서동 채록·정리, 『영원한 우리들의 아픔 4·3』, 월간관광제주, 1990, 내지 사진, 본 논문 62쪽 수록.

로서 ‘자위대’를 동시에 준비하고 조직했다. 다만 봉기를 위한 무장대의 조직이 더디게 진행되었고 준비가 원활치 못했을 따름이었다.

둘째, ‘유격대’와 ‘자위대(특무대)’는 무장조직과 비무장 후속부대로 엄격하게 구분되었다.

셋째, 「투쟁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급박한 무장투쟁국면에서 도당사령부(무장대)가 잦은 조직체계 변화를 피했음을 알 수 있다. 즉, 무장대는 4·3봉기 직전부터 1948년 7월 25일까지 무려 5차례 걸쳐 조직체계 정비를 했다. 이처럼 봉기 초기의 잦은 조직체계 변화는 준비단계에서의 부족함을 조직운용의 경험을 통해 보완한 것이었다.

넷째, 유격투쟁이 본격화 되면서 군사부가 눈에 띄게 강화되고 보급과 정치·군사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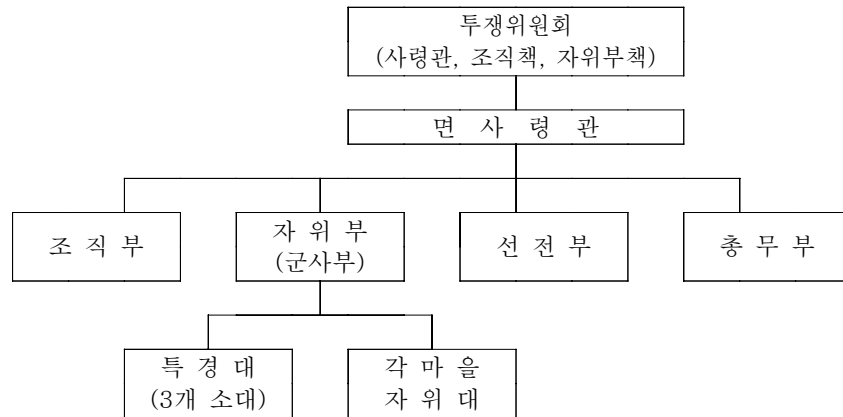
다섯째, 지대(支隊)는 5월말부터 편성되었으며 4개 지대로 무장대가 구성되었다.



4) 면당(面黨)의 조직체계

도당사령부 산하의 면당에 대한 체계는 「투쟁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고 있다. 면당은 지역적 형편에 따라 조직체계 및 인원을 달리했는데, 대정면당사령부에 대해서 당시 입산경험자의 증언을 통해 확인했다.

<그림6>대정면당사령부 조직체계



대정면당의 자위부책은 가명을 썼고 도당에서 파견했다. 지도원이라고도 하는데 1명이 온다. 고정적으로 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면당에서 인선했다. 도당과 마찬가지로 면당에는 케(캡틴=사령관), 조직책, 자위부(군사부)책 세 사람이 결정했다. 총무부는 식량 등의 보급을 담당하고 선전부는 배라를 만들고 마을에 가서 선전하는 역할을 했는데 학생들이 많았다. 당시 대정면당의 무장대원은 약 30명 정도였고, 다른 면당에 비해 많은 편이었다. 그것은 9연대가 대정면에 있어서 9연대 병사들이 탈영해 무장대에 합류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가져오는 무기는 모두 도당사령부로 올려 보냈다.

특경대는 흔히 말하는 무장대다. 대정면당의 특경대는 3개 소대가 있었는데 1개 소대는 3분대로 이루어졌고 1개분대의 인원은 3~4명이다. 3개 소대를 거느리는 특경대장은 중대장 격이고 자위부책은 대대장 격이었다. 자위대책은 직접 군사행동에 나서지 않고 대부분 중대장이 인솔했다.

각 마을별 자위대는 마을의 형편, 즉 좌익세력이 그 이전에 분위기를 다잡아놓거나 단결력이 좋았던 데는 인원이 많았고, 또, 큰 마을과 무장대의 영향력이 강했던 중산간 마을이 비교적 그 수가 많았다. 특히 '민주부락'이라고 일컬어지는 마을은 자위대의 조직도 잘 되었다. 하지만 무장을 갖춘 마을 자위대는 거의 없었다.⁸⁴⁾

84) 제주4·3연구소, 「증언, 내가 겪은 4·3」, 『4·3長征 6』, 나라출판, 1993, 75~77쪽, 필자가 재구성함.

5) 조직 강화

(1) 훈련

본격적으로 전투를 담당하는 무장대와 연락병, 취사대 등 전투부대를 지원하는 부대는 엄격히 구분하여 생활하고 훈련했다. “무장대는 하루 3차례의 점호가 있었으며 오전 점호 뒤에는 1시간 동안 달리기를 하는 등 엄격한 체력훈련도 실시했다. 지원부대는 나무 모으기와 숲 만들기, 식량 운반 등의 역할을 했다. 전투부대와 지원부대 대원들 간의 개인접촉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 습격 나갈 때는 전투부대와 여러 지원부대 인원들이 함께 집합해 점호를 받으며, 무기와 실탄이 지급”⁸⁵⁾되었다.

(2) 교육 및 보안

「투쟁보고서」에는 조직정비 때마다 엄격한 규율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정치지도원들은 끊임없이 남로당의 목적을 강조했다.⁸⁶⁾ 그들은 또 “경찰

85)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자료집 9 미국자료편③』, 2003, 49쪽.

86) 남로당 강령은 다음과 같다. ①우리 당은 조선인민의 이익을 진정하게 대표하고 옹호하는 당으로서 조선근로인민에게 민주주의와 개혁실시를 보장할 수 있고 연합국가대열에 동등한 국가의 자격으로서 참가할 수 있는 강력한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의 건설을 과업으로 한다. ②이러한 과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조선근로인민의 모든 힘의 단결을 도모하나 그것은 조선에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며, 이 건설의 보장을 목적으로 모근 권력을 참된 인민정권의 기관인 인민위원회에 넘기기 위하여 투쟁한다. ③조선에서 봉건적 요소를 철저히 제거하기 위하여 일본국과 일본인 및 조선인 지주들에게 토지를 몰수하여 토지 없는 농민과 토지 적은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토지개혁실시를 주장한다. ④노동인민에 기본적 민주주의적 권리를 보장하여 노동인민의 실질적 복리를 향상하기 위하여 8시간 노동제 실시와 사무원의 사회보험과 성별, 연령의 차이 없이 남녀노동의 동등 임금제를 위하여 투쟁한다. ⑤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를 물질적 토대 위에 세울 것을 목적으로 일본 국가와 일본인과 조선민족반역자에게 속한 산업, 광산, 철도, 해운, 통신, 은행과 금융기관, 산업기관 및 문화기관의 국유화를 주장한다. ⑥조선의 모든 국민에게 민주주의적 권리를 보장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특히 정당, 사회단체 조직, 시위, 파업 및 신앙의 자유를 주장한다. ⑦조선인민에게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친일분자와 민족반역자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재산유무, 거주, 신교(信敎), 성별, 교육정도와 차이가 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향유하게 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⑧여자에게 남자와 평등한 정치적, 법률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주며, 가정생활 풍속관계에서 봉건적 요소를 청산하여 어머니와 아동의 국가보험을 위하여 투쟁한다. ⑨교육기관에서 일본교육제도를 청산할 것과 전 조선인민의 지식정도 향상을 목적으로 인민교육계획의 실시, 모든 국민에게 재산유무, 신앙, 성별의 차이를 불문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와 보장

이나 경비대에 잡힐 때는 부대의 위치나 인원을 누설하지 말고, 오도(誤導)하거나 거짓말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세부지침을 대원들에게 교육했다. 부대 지휘관들에게는 ‘선전 선동 활동’과 관련한 지침들이 하달됐다.”⁸⁷⁾ 무장대는 주로 아침 조회시간에 자기비판 시간을 가졌고, 정치지도원들은 ‘3대 규율, 8항주의, 자유주의배격 11조’를 암기시켜 엄격하게 지키라고 요구했다.⁸⁸⁾

하지만 규율의 흐트러짐도 많았다. 습격을 할 때 민가에 들러 술을 마신다거나, 동료의 자그마한 실수가 내부 숙청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⁸⁹⁾ 특히 경찰 및 우익인사의 가족과 친척, 어린아이들한테 가한 무분별한 테러·살해는 커다란 오점이 되었다.

(3) 4·15 도당부대회(島黨部大會)

『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에는 “4월 15일 남로당제주도위원회

를 목적으로 하고 의무적 일반 무료 초등교육, 조선민족문화, 예술, 과학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한다. ①근로인민에게 무겁게 부담되어 있는 일제적 세금제 등의 청산을 목적하고 진보적 세계와 실시를 위하여 투쟁한다. ②조선인민공화국의 자유로운 자주독립 존재의 보장을 목적하고 민족군대의 조직과 일반 의무병제의 실시를 주장한다. ③연합국 대오에서 세계평화를 위한 투쟁에 적극 참가하기 위하여 모든 인국(隣國)들과 또 다른 평화 애호국들과의 친선을 굳게 할 것을 주장한다.(제주도경찰국, 『제주경찰사』, 1990, 287쪽, 포고령 위반 피의자 김완배 소장품 압수 제23호)

87)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자료집 9 미국자료편③』, 2003, 49쪽.

88) 「제주도 혈의 역사」, 노민영 편, 『잠들지 않는 남도』, 온누리, 1988, 138~139쪽.

1)3대 규율 : ①일체의 행동은 지휘에 따른다. ②대중으로부터 못 하나 실 한 토막도 취하지 않는다. ③노획품은 모두 공유로 한다. 2)주의 8항 : ①이야기는 온화하게. ②물건 값 지불은 공정하게. ③빌면 반드시 돌려준다. ④물건을 파손하면 변상한다. ⑤사람을 때리거나 소리 지르지 않는다. ⑥농작물을 황폐하게 않는다. ⑦부인을 희롱하지 않는다. ⑧포로를 괴롭히지 않는다. 3)자유주의배격 11훈 : ①동창·친척·부하·동료의 잘못을 알면서 책하지 않고 화평의 수단으로 방임하는 것. ②전면에서 말하지 않고 배후에서, 회의에서는 말하지 않고 회의 후에 난의(亂議)하는 것. ③타인을 책하지 않고 말하지 않음이 명석한 보신술이라고 침묵하는 것. ④간부라고 자기 의견만 고집하는 것. ⑤개입공격을 주로 삼으며 보복하려는 것. ⑥반혁명분자의 말을 듣고도 보고하지 않는 것. ⑦선동·선전하지 않고 당원의 입무를 망각하는 것. ⑧군중의 이익에 해를 주는 행동을 보고도 격분하지 않는 것. ⑨사무에 충실하지 않고 하루를 되는대로 지내는 것. ⑩노선배연(老先輩然)하며, 대사는 할 능력이 없고 소사는 하기 싫어하는 것. ⑪자기의 착과(錯過)를 알면서 개정하지 않고 또는 자기를 책하되 비판 실망에 그치고 마는 것.

89) 제주4·3연구소, 「증언, 내가 겪은 4·3」, 『4·3長征 6』, 나라출판, 1993, 75쪽, 91쪽.

는 도당부대회를 소집하여 무장투쟁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토의를 거듭한 결과, 기존의 자위대를 해체하여 열렬한 혁명정신과 전투경험의 소유자 30명씩을 선발하여 ‘인민유격대’를 조직하였다”고 했다.⁹⁰⁾ 김점곤은 이 대회를 기정사실화 하여 ‘4·15도당부대회’의 의미를 “첫째, 남로당 중앙당의 노선과는 달리 무장투쟁으로 나선 ‘돌발적인 4·3봉기’를 중앙당 차원에서 조정하려는 시도이고 둘째, 대중의 희생을 감소시키고, 당의 조직을 온존케 하며 장기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해진 사후수습책”이라고 분석했다. 또, 그는 이 대회가 “중앙당의 지도가 없이는 취해질 수 없는 차원의 조치이며, ‘모험적이며 무모한 무장극한투쟁’인 4·3봉기가 중앙당부에 의해서 계획되고 통제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암시하려는 것”이라 해석했다.⁹¹⁾

하지만 소위 ‘4·15제주도당부대회’에 대해서는 김봉현·김민주의 주장 이외에 관련 근거가 아무 것도 없다. 필자는 4월 15일 ‘도당부대회 소집’ 자체에 의문을 갖는다. 그 이유는 첫째, 김봉현·김민주가 주장하는 도당대회의 후속조치로 김달삼 명의의 ‘5·10단독선거 반대성명’을 발표했다고 하지만 ‘성명’보다 더욱 전투적인 ‘포고문’이 ‘인민해방군(人民解放軍)’ 명의로 4월 10일 발표되었다.⁹²⁾ 둘째, <표4>에서도 확인되지만 4월 15일 당일 무장대에 의한 공격이 있다는 점이다. 또, 모슬포의 경비대 해안초소를 공격했다는 보고⁹³⁾도 있다. 만약 당의 진로를 결정하는, 그것도 중앙당이 참여하여 ‘돌발적인 상황을 조정하고 수습’하는 회의라면 향후 방침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날만큼은 모든 활동을 중단했을 것이다. 더군다나 비중 있는 회의라면 면당을 포함한 모든 지휘부는 도당대회에 참석했을 것이다. 회합 장소에 따라서는 하루 만에 도착하지 못

90) 김봉현·김민주, □□濟州島人民들의 4·3武裝鬪爭史□□, 文友社, 1963, 88쪽.

91) 김점곤, 『韓國戰爭과 南勞黨戰略』, 박영사, 1973. 160~161쪽.

92) 박서동 채록·정리, 『영원한 우리들의 아픔 4·3』, 월간관광제주, 1990, 내지 사진.

93) HQ USAFIK G-2 Periodic Report(No. 813, 1948. 4. 20)

할 먼 거리의 지도부도 당연히 참석을 했을 것이다. 그러한 회의가 있는 날, 제주도의 동쪽과 서쪽에서 마을을 습격하고 특히, 경비대의 해안초소를 공격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셋째, 김봉현·김민주는 이 날의 회합을 통해 최초 봉기 조직인 ‘자위대’를 해산하고 ‘인민유격대’를 조직했다고 했지만, 앞서 살폈듯이 3월 15일 이후 남로당은 각 면마다 유격대 조직을 준비했고 그 유격대가 4월 3일의 지서습격을 주도했다. 넷째, 미군정의 각종 정보보고에 관련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중요한 회의였다면 차후에라도 경과를 설명하는 보고가 있음직 한데 미군정보고서 어디에도 4월 15일 회합에 대한 보고가 없다. 마지막으로 「투쟁보고서」에도 그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이 점은 4·15도당대회를 통해 중앙당이 사후 승인을 했다는 주장의 허점을 드러낸다. 또, 「투쟁보고서」에 중앙당이 언급된 것은 국방경비대 동원 실패의 경과를 설명할 때 이외에는 1948년 5월 7일 중앙에서 ‘올구’가 내려왔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더구나 이때 ‘중앙당 올구’는 “국경(國警)의 지도를 ‘도당(島黨)’에서 할 수 있다고 언명해서 혼란만 더욱 가중시켰고 오히려 투쟁의 약점으로 작용”⁹⁴⁾했다.

따라서 ‘4·15도당부대회’는 확인할 수 없는 주장이고, 「투쟁보고서」의 기록을 분석했을 때, 실제 회합이 없었거나 혹은 일상적인 지도부회의를 통해 어떠한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병력 및 무기

1) 병력 규모

최초 봉기 인원이 3천명이었다는 주장⁹⁵⁾도 있으나 상황은 그렇지 않았

94) 문창송 편,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 앞의 책, 78~79쪽.

95) 김봉현·김민주, □□濟州島人民들의 4·3武裝鬪爭史□□, 文友社, 1963, 83쪽.

다. 앞서 살폈듯이 최초 봉기 인원은 320명이며 이들 중 무장을 한 인원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후 5차에 걸친 조직정비에 의해 7월말에는 지도부 35명, 통신대 34명, 유격대 120명, 특무대 320명으로 501명이 조직되었다.⁹⁶⁾ 조직체계 변화에 따라 총인원이 늘었으나 충기를 가질 수 있는 실질적인 전투부대인 유격대는 봉기 최초 100명에서 7월말 120명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

이를 통해서도 확인되지만 7월말까지만 해도 남로당제주도당은 전투조직인 유격대의 참가 인원을 수시로 조정할 수 있을 정도의 탄탄한 조직기반을 갖추었고, 각 면은 충분한 인원을 제공하고 있었다.⁹⁷⁾ 또, 이 시기 중산간 지역은 거의 무장대에 의해 장악되고 주민들도 호응했다.⁹⁸⁾ 뿐만 아니라 당에서 입산해서 활동하라는 명령이 오면 영광으로 생각하던 시기였다.⁹⁹⁾

한편 봉기 초기 9연대 병사들의 탈영 입산은 무장대 측으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었다. 7월 24일까지 해안경비대 1명 포함 75명이 탈영 입산했다. 이중 1948년 5월 21일 탈영 직후 피검된 22명과 도주한 1명을 제외한 52명이 무장대에 편성되었다.¹⁰⁰⁾

무장대는 입산하는 경비대 사병들을 우대했는데, 비교적 체계적인 군사 훈련을 받았다는 점과 충기를 다룰 줄 알았다는 점을 높이 산 것이다. 특히 제주도의 지리를 잘 모르는 타 지역 출신 병사들은 제주 출신들로부터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우리가 인항동에 있을 때, 미군과 9연대가 합동으로 토벌을 온다는 정보가 올라

96) 문창송 편,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 앞의 책, 27쪽.

97) "Report on South Korean Labor Party, Cheju Do," June 20, 1948, RG 338: Records of US Army Command(1942-), US Army Forces in Korea 1945-49, Entry No. 11071, Box No. 2, NARA, Washington, D. C.

98) 박동우의 증언(제민일보4·3취재반, 『4·3은 말한다』 3권, 전예원, 1995, 169쪽.)

99) 김민주(남, 1932년생)의 증언(2004. 10. 16. 제주 로베로호텔, 필자 채록)

100) 문창송 편,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 앞의 책, 80쪽.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이 있는데 '1948년 2월 말 15명의 경비원을 태운 해안경비정이 한림읍 자위대의 공작에 의거 10정의 무기를 제공하였고 그 중 1명은 자위대에 투항했고 나머지는 해안경비를 담당했다'는 것이다.(김봉현·김민주, 『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 1963, 78쪽)

온 거라. 경찰이 토벌 온다면 대항하지만 군인과 미군이 합쳐서 온다니까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무장부대 각 기관들은 분산해서 토벌기간 동안만 안전하게 피했다 오라고 했어. 마침 그 며칠 전에 서립과 마라도에서 올라온 경비대 군인 12명이 있었는데, 각 소대장들에게 2~3명씩 짝을 지어주면서 토벌 기간에 안전하게 다니라고 했어. ‘너는 죽어도 이 사람들은 잡히거나, 부상당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했던거야.¹⁰¹⁾

그런데 무장대의 초기 병력과 관련하여 경비대의 탈영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총기를 소지한 무장대 병력이 120명 안팎이었는데 그 중 경비대 탈영자가 거의 반수에 근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비대의 탈영은 무장대의 전투력 향상과 대원 확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2) 무기

최초 봉기 시 30정 안팎이던 무기는 7월 하순에 이르러 M1 6정, 카빈 19정, 99식 117정 등 소총 147정과 탄환 7,740발, 권총 8정 등으로 대폭 늘어난다.¹⁰²⁾ 물론 이 또한 경비대의 탈영에 따른 확충이었다. 또, 지서 습격 등에 의해 병기 및 탄환을 탈취하면서 증가했지만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일본군이 쓰던 총 두 자루로 대정지서를 습격했다는 한 증언자는 “9연대 입산 등으로 무기가 늘었음에도 30여명의 대원을 거느린 면당 특경대의 무기가 카빈 5정 정도였다. 다만 도당 소속 부대원들은 M1, M2, 카빈2 등도 있었다.”고 했다.¹⁰³⁾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무장대의 총기는 99식 일제 소총이 주류를 이루었다. 탄환도 항상 부족했다. 이에 무장대는 실탄을 실제 습격이 계획될 때만 지급했다. 그리고 총을 소지한 대원은 습격이 끝난 뒤 사용하지 않은 실탄을 반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¹⁰⁴⁾

101) 제주4·3연구소, 「증언, 내가 겪은 4·3」, 『4·3長征 6』, 나라출판, 1993, 79쪽.

102) 문창송 편,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 앞의 책, 27~28쪽.

103) 제주4·3연구소, 「증언, 내가 겪은 4·3」, 『4·3長征 6』, 나라출판, 1993, 75쪽.

104)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자료집 9 미국자료편③』, 2003, 49쪽.

Ⅲ. 무장대의 작전과 활동

1. 시기별 작전 및 활동일지

1) 시기별 작전

「투쟁보고서」는 1948년 3월 15일부터 7월 하순까지의 작전을 6차에 나누어 기록하고 있다. 시기별 작전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⁰⁵⁾

제1차 작전(3. 15~4. 2) : 4·3투쟁을 위한 조직과 병기 준비와 정보수집 기간.

제2차 작전(4. 3~4. 20) : 국방경비대(國警)를 동원한 제주읍 공락이 국경의 불참으로 실패로 돌아간 후 지서 습격을 주목적으로 하여 활동한 시기.

제3차 작전(4. 20~5·10직전) : 조직 수습과 확대 강화의 엄호를 위해 부락 주둔을 개시하고, 동시에 반동숙청¹⁰⁶⁾에 주력한 시기.

제4차 작전(5·10~5. 26) : 각개 격파의 전술로서 주력 부대를 2그룹으로 편성, 5·10 당일에는 각 부락을 유격하면서 투표 보이코트전을 전개(주로 남부). 그 후 세력을 집결하여 대규모 투쟁을 전개하여 유격전을 매우 활발히 전개한 기간.

제5차 작전(5. 27~6. 18) : 약 4,000명 병력의 국경(國警)과의 충돌을 피하며 그들의 포위 토벌전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동시에, 일면으로는 국경 내부의 충돌 특히, 대내 최고 악질 반동인 박진경(朴珍景)연대장 암살과 탈출병 공작을 추진.

105) 문창송 편,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 앞의 책, 29~33쪽.

106) 반동 : 프랑스혁명 후인 1795년 처음 사용되었고, '구체제(舊體制)를 부활하기 위하여 취하는 정치적 행동'이란 뜻이다. 원래는 역학상의 용어지만 보통 '진보'에 대한 반작용을 의미하는 '정치적 반동'이라는 말로 사용된다. 제주4·3사건 당시에는 자신들의 노선에 반대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남로당의 용어로 우익인사 및 협조자 등을 일컬었다.

숙청 : 사전적인 의미로는 '독재정당이나 비밀결사 내부에서 조직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대자를 추방하여 조직의 순화를 도모하는 일'이나, 여기서는 반대자를 살해한다는 의미임.

제6차 작전(6. 19 이후) : 국경에서 철거전술(撤去戰術)을 쓰기 시작하자 각처에 분산 되고 있는 조직을 질적 면에서 정비 강화하고 정치부원의 확립에 의한 정치교육의 강화, 일상생활의 규칙화에 의한 규율 강화 등에 주력한 시기.

이를 통해 무장대의 작전변화는 최초 조직준비 이후 다섯 차례에 걸친 조직정비와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2) 활동일지

필자는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무장대 관련 활동일지를 작성했다. 이 활동일지는 「투쟁보고서」에 기록된 ‘각 면별 투쟁일지’를 중심으로 작성했고, 이의 검증과 「투쟁보고서」에 기록되지 않은 활동사항의 보충을 위해 『4·3은 말한다』와 미군정자료 그리고 제주도 각 마을의 향토지 등을 참고로 작성했다.

「투쟁보고서」는 6차에 걸쳐 작전시기를 달리하고 있지만, 필자는 크게 두 시기로 나누었다. 즉, 무장봉기를 결정했던 3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의 기간과 그 이후 7월 하순까지의 기간으로 나누고자 한다. 그 이유는 앞의 기간은 봉기를 준비하고 무장대가 내건 슬로건인 “극악반동 숙청과 단선단정 반대”를 위한 활동이 집중된 시기이며, 그 이후는 새로운 활동방향을 모색했던 기간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1) 5·10선거까지의 활동일지(1948. 3. 15~5. 10)

20여일 정도의 준비와 무장봉기 이후 40여일에 이르는 활동기간이다. 무장대의 봉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 집약적으로 분출된 이 시기 활동 상황은 <표3>과 같다.

<표3> 무장대 관련 일지(1948. 3. 15~5. 10)

월일	지역	내용	피해상황	출처
3.15		남로당, 무장반격전 결정		E:17
3.18	제주 도련	무장대 습격	우익7 부상, 가옥3 소각	E:34
3.20	한림	무장대 훈련 중 피습	유격1 부상	E:46, W:588
3.28		남로당, 봉기 일시 결정		E:17
4. 1	제주	영림서원2 납치, 석방		E:35
4. 3	남원 남원	무장대 30명 남원지서 습격	경찰1·우익1 사망, 우익2 부상, 무기 탈취	A:26, E:58~59
	애월 구엄	무장대 100명 우익 및 신업지서 습격	우가5 사망·10명 부상, 경찰1 중상, 유격2 사망	A:29~30, E:40~41, f:807,818
	애월 애월	무장대 애월지서 습격	경찰1 부상	E:42, I:332
	한림 한림	무장대 30여명 한림리 우익 및 한림지서 습격	경찰1 사망·2명 부상, 우익6 부상, 유격1 생포	A:32, E:46~47
	제주 화북	무장대 화북지서 습격	경찰1·경가1·우익1 사망, 지서 전소	A:33, E:34, S:146
	제주 외도	무장대 외도지서 습격	경찰1 사망	A:33, E:35
	조천 조천	무장대 조천지서 습격, 퇴각	없음	A:34, E:62
	구좌 세화	무장대 세화지서 습격	경찰2 부상	A:35
	대정 보성	무장대 대정지서 습격	경찰1 부상	A:38
	대정	무장대 대정단장 습격	우익1 부상	A:38
	성산 성산	무장대 40명 성산지서 습격	무장대 퇴각	A:40, E:59
	제주 삼양	무장대 20명 삼양지서 습격	무장대 퇴각	E:34, I:326
	조천 함덕	무장대 50명 습격	경찰2·우익4 납치	E:62, I:327
제주 이호	비무장시위대 40명 대청사무실 피습 시위	사무실 일부 파손	A:67	
4. 4	조천 조천	무장대 조천지서 습격	경찰2 부상, 유격1 사망	A:35, e:63
	제주 영평	무장대 대청단원 습격	우익1 사망	A:66, E:35
4. 6	제주 이호	무장대 대청단원 습격	우익2 사망	A:67, e:36, F:803
	제주 봉개	무장대 대청단장 습격	우익1·우가3 부상, 경상자3	F:803, H:(48.4.8)
4. 7	한림 지지	무장대 습격	우익3·유격1 사망, 지서 전소	A:68, E:48
4. 8	성산 성산	무장대 성산지서 습격	유격1 사망	A:68, F:807
	한림 한림	무장대 습격	유격1 사망	A:68
4. 9	애월 금덕	무장대 습격	우익1 사망	E:42
4.10	애월 장전	무장대 습격	우익2 사망	B:89, e:42
	안덕 덕수	무장대 대청단원 습격	우익1 부상, 가옥1 소각	E:55

4.11	제주 오라	무장대 경찰가족 습격	경가1 사망	A;70, E;36
	애월 광령	구엄지서 토벌대 마을 습격, 이후 천안악 전투	경찰3 사망	E;42, F;807
	애월 애월	무장대 애월리 가두 기습	경찰 사망1·부상1, 우익1 부상, 지서 일부 파괴	E;43, F;807
4.13	제주 화북	경찰, 무장대 은거지 습격	경찰1 사망	A;71, e;36
4.14	제주 외도	무장대 외도지서 습격	유격1 사망(송철)	E;36
	조천 교래	무장대 경찰기동대 습격	경찰2 사망	E;63
	조천 조천	무장대 조천지서 3차 습격	경찰7 사망, 서청2~3 행불	E;63, f;810 ¹⁰⁷⁾
4.15	조천 대흘	무장대 습격	우익1 사망	E;63, f;812
	대정	무장대, 경비대 해안초소 습격	없음	F;813
4.17	조천 선흘	무장대 대청단원 습격	우익3 사망	A;71
	제주 삼양	경찰·무장대 전투	유격 군조직책 체포, 사망	J;89, E;36
4.18	조천 신촌	무장대 경찰가족 습격	경가1 사망	a;71, E;64, F;813
	애월 광지	무장대 경찰친척 습격	경가1 사망	A;72, E;43, F;814
	제주 도평	무장대 투표소 기습	선거기록 탈취	F;815
4.19	조천 신촌	무장대 투표소 기습	투표소 전소, 명부 탈취	F;815, e;64
	제주 외도	무장대 외도지서 습격	경찰1 부상, 지서 반파괴	E;36
4.20	애월 장전	무장대 습격	주민1 사망	B;89
	제주 월평	무장대 습격	주민2 사망	E;37
±4.20	조천 함덕	무장대 습격	우익2 사망	E;64~65
4.21	대정 동일	무장대 습격	선관1 사망	A;73, e;52, F;816
	애월 구엄	무장대 구엄지서 2차 습격	경찰1 부상	E;43
4.27	제주 애월	무장대, 쌀 공출하는 외도지 서원 매복 습격	경찰 사망1, 부상1	E;44
4.28	대정 구억	무장대 사령관 김달삼-9연대	연대장 김익렬 회담	
	제주 화북	무장대 '황새왓'(3구) 습격	선관1 납치, 사망	A;74, E;37, F;824
	제주 노형	노형2구, 무장대-경찰 전투	경찰3 부상	E;37
	대정	무장대 면사무소 습격	우익 사망1·부상1, 남로당원 1 사망	E;52
	대정 안성	무장대 습격	우익1 중상	E;52
4.29	제주 오라	오라리 주민, 우익 납치	우익2 납치	A;150
4.30	제주 오라	무장대, 대청단원 가족 납치	우가1 사망, 1부상	A;154, F;823
하순	안덕 동광	무장대 습격	경가1 사망	E;55
	조천 신흥	무장대 경찰 가옥 습격	가옥1 소각	E;65
	조천	무장대 우익 습격	우익1 사망	E;65
5. 1	제주 오라	방화사건과 상호 전투	경가1·주민1 사망	A;154, e;37, F;824

	제주 도평	무장대 습격	선관1 사망, 우익1 납치	A:213
	대정	무장대 신평리, 영락리 습격	각각 우익1 사망	E:52, F:823
5. 5	제주 화북	무장대 5명 습격	산관1 · 주민2 사망	A:213, E:38, F:824, S:148
	제주 내도	무장대 습격	주민1 사망	A:214, f:826
	대정 보성	무장대 습격	우익1 사망	E:53
	대정 영락	무장대 습격	우익1 우가2 사망	E:53
5. 6	대정 무릉	무장대 무릉지서 습격	유격1 사망	B:61, F:828
	제주	무장대-경찰 전투	경찰2, 유격2 사망	E:38
5. 7	애월 장진	무장대-경찰 전투		A:262, E:44
5. 8	제주 오등	무장대 습격	우가8 사망 · 부상 1 · 납치 1, 주민2 사망	A:215~6, E:38
	제주 아라	무장대 습격	선관1 · 우가1 사망	A:216, E:38
5. 9	한림 금악	무장대 매복 습격	선관1, 우익1 납치 살해	B:44
	제주	농업학교 수류탄 투척	위협	E:38
	제주 도두	선거보이콧 거부 주민 희생	주민1 사망	B:46
	구좌 송당	무장대 습격	선관1 · 우익1 사망, 가옥 소각	B:55, E:60, F:834
	구좌 동복	무장대 습격	우익1 사망, 가옥1 소각	E:60
5.10	제주	제주읍사무소 선거방해	수류탄 투척	E:38
	안덕 광평	선거사무소 습격	투표 보이콧	E:55
	표선 가시	무장대 투표소 습격	선관1 · 주민2 사망	A:227, E:58, T:73
	성산 수산	무장대 투표소 습격	주민3 사망, 향사 소각	A:230, E:59, M:46
	구좌 덕천	선거사무소 습격	투표함 파괴, 가옥1 소각	E:61
	중문 하예	선거사무소 습격	투표함 파괴	E:56
	중문 상예	무장대 습격	우익2 · 우가1 사망, 명부 탈취	A:231
	중문 색달	무장대, 투표소 습격	투표 방해	V:71
±5.10	애월 광령	무장대, 선거사무소 습격	선거문서 소각	U:74

《범례》=<표5>에도 적용 됨

△출처108)

A : 제민일보4·3취재반, 『4·3은 말한다』 2권, 1994.

B : 제민일보4·3취재반, 『4·3은 말한다』 3권, 1995.

C : 제민일보4·3취재반, 『4·3은 말한다』 4권, 1997.

D : 제민일보4·3취재반, 『4·3은 말한다』 5권, 1998.

E : 문창송 편,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묻혀진 4·3의 진상』, 1995.

F : 주한미육군사령부 일일정보보고(HQ USAFIK, G-2 Periodic Report)

G : 제민일보 / H : 제주신보 / I : 제주도경찰국, 『濟州警察史』, 1990.

107) 경찰 사망 1명으로 보고하고 있다.

108) 표 작성에 있어 주요 자료는 A~G이다. 나머지 자료는 앞 자료의 입증 및 누락된 상황을 정리하는데 활용했다.

- J : 김봉현·김민주, 『濟州島人民들의 4·3武裝鬪爭史』, 1963.
 K : 국방부군사편찬위원회, 『對非正規戰史』, 1988.
 L : 제주도의회, 『濟州道4·3被害調査報告書-修正·補完版』, 1997.
 M : 『水山里誌』, 1994. / N : 『明月郷土誌』, 2003. / O : 『西洪里誌 西洪爐』, 1996.
 P : 『和順里誌』, 2001. / Q : 『坪垵里誌』, 1990. / R : 『漢東里誌 둔지오름』, 1997.
 S : 『禾北洞郷土誌』, 1991. / T : 『加時里誌 가스름』, 1988. / U : 『古城里誌』, 1993.
 V : 『색달마을지』, 1996. / W : 제민일보4·3취재반, 『4·3은 말한다』 1권, 1994.

△대소문자 구분

- 대문자 : 비교대상 자료와 일치 ○ 소문자 : 상황은 비슷하나 일자 등의 차이가 있음.
 단, 단일 자료에 기록된 경우 모두 대문자 표기함.

△ 알파벳 뒤의 숫자는 쪽 표기, 단, F 뒤의 숫자는 문서번호.

△ E의 자료 중 접진 및 상호피해가 없는 ‘퇴각’, ‘철수’ 등은 일지에서 생략함.

△ H~V의 자료 중 A~G의 자료를 인용한 기록은 생략함.

- △ 약어 : 우익=대동청년단원, 서북청년단원, 독립촉성국민회, 지서 협조원, 경찰 사환 등
 우가=우익단체원, 선거관리위원의 가족, 경가=경찰의 가족, 친척
 선관=선거관리위원, 유격=유격대원, 국경=국방경비대

△ 지역표기 : 읍(면) 리

△ 일자 : 초=초순, 하=하순, ±=표기 날짜 전후

이 기간은 무장봉기를 위한 준비와 그들이 내세운 봉기의 목표인 ‘극악 반동 숙청과 단선단정 반대’를 위해 활동을 집중한 시기이다.

1948년 3월 15일부터 4월 2일의 준비기간 동안 남로당제주도위원회는 무장투쟁의 결정을 놓고 지도부간 이견이 분출되는 등 긴박한 시기였다. 격론 끝에 3월 15일 무장봉기를 결행하기로 합의한 남로당은 조직적으로는 ‘유격대’와 ‘자위대’를 꾸리고, 무장투쟁에 필수적인 병기 준비와 정보 수집에 주력했다. 준비는 극비합법적(極秘合法的)으로 진행됐지만 여의치 않았다. 무장투쟁의 수위를 놓고도 각 지도부간의 합일된 생각이 없는 등 조직적·계획적인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무장봉기 방침이 결정됐다.

하지만 봉기일을 결정하고 행동에 나선 무장대는 4월 3일 지서를 집중 공격하며 탄압에 대한 저항의지를 분명히 하였고, 이후 5·10단선 저지를 위해 선거업무에 협조하는 우익단체원을 공격했다. 이 기간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자.

<표4> 지역별 활동 현황(1948. 3. 15~5. 10)

구분	지서·마을습격	전투	기타	계
제주읍	22(5)	5(2)	2(1)	29(8)
애월면	10(3)	2		12(3)
한림면	5(1)			5(1)
대정면	9(4)	1		10(4)
안덕면	3(3)			3(3)
중문면	3(1)			3(1)
서귀면				
남원면	1			1
표선면	1			1
성산면	3			3
구좌면	4(2)			4(2)
조천면	11(2)	1(1)		12(3)
계	72(21)	9(3)	2(1)	83(25)

()의 숫자는 「투쟁보고서」에만 기록된 숫자 : <표6>에도 적용됨.

(2) 5·10선거 이후의 활동 일지(1948. 5. 11~7. 9)

5·10선거가 무산되면서 일정 정도 목적을 달성한 무장대는 5월 10일 이후 지서습격 및 우익인사에 대한 테러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활동을 멈추지는 않았다. 5·10선거 이후 60여 일간의 활동 상황은 <표5>와 같다.

<표5>무장대 관련 일지(1948. 5. 11~7. 9)

월일	지역	내용	피해상황	출처
5.11	제주 도두	무장대 우익 납치	선관1·우익2 납치 살해	B:46, E:38
	구좌 하도	무장대 습격		E:61
	구좌 상도	무장대 습격	우익2 사망, 가옥1 소각	E:61
	구좌 평대	무장대 면사무소 습격	면사무소 소각	E:61, Q:99
	구좌 한동	무장대 습격	주민2 사망, 부상2	E:61, R:123
	구좌 월정	무장대 습격	가옥1 소각	E:61
5.12	조천 조천	무장대 습격	주민2 사망	B:25
5.13	조천 함덕	무장대 함덕지서 습격	경찰7·주민1 사망	B:25~28, E:67~69, F:835

	한림 저지	무장대 150여명 습격	경찰1·우익1·우가1·주민1 사망, 가옥 100여채·학교 소각	B:32~34 ,E:48, F:835,840
5.14	한림 한림	무장대 100여명 습격	경찰1·유격1 사망	B:38~9, E:49~50, F:836
	한림 명월	무장대 습격	우익4 납치살해, 우가1 사망·납치2, 주민1 납치	B:39~40, E:49, F:840, N:232
	한림 동명	무장대 습격	경찰가옥1 방화	B:40
	한림 금악	무장대 습격	우익1·주민2 사망, 주민1 부상, 가옥 7채 소각	B:42~43, E:49
	제주 도두	무장대 우익 납치	우익 부자 납치 살해	B:46
5.15	조천 함덕	함덕지서 경찰1 무장대 합류		E:70
5.16	조천 조천	조천지서원3 무장대 합류		E:70
5.17	안덕 광평	국경, 무장대 기습	유격1 포로 사망	E:84
±5.17	조천 조천	무장대 양천동 습격	우익 및 가족 7명 사망	E:71
5.18	제주 도두	무장대 우익가족 납치	우가6 납치 살해	B:47, F:842
	대정 영락	무장대 습격	우익 일가4 사망	B:57
	제주 화북	우익인사 습격	우익1 사망	E:39
5.20		9연대 탈영사건	장병43명 탈영입산	B:106~114, E:53, F:842
	대정 보성	9연대 탈영병 대정지서 습격	경찰4·급사1 사망, 경찰2 부상	B:114~118, E:53, F:842
5.21	대정 보성	무장대 대정지서 습격	지서 소각	B:128, E:53
	남원 남원	경찰 토벌대 작전	유격1 사망	E:85
5.22	안덕 상창	무장대 습격	우익1 사망	B:74
	안덕 창천	무장대 습격	우익2 사망	B:74
		9연대 탈영병 체포	탈영병 중 20명 체포	B:130
5.23	대정	면사무소 습격	문서 탈취	E:53
	중문 상예	무장대 주민 납치	주민1 납치 살해	B:75, e:56
	중문 색달	무장대 주민 납치	주민1 납치 살해	B:75, e:56
	구좌 상도	무장대 습격	주민 사망	E:61
5.24	애월	국경 작전	애월 무장대 연락원 두모리에 서 피검, 석방	E:85
5.25	서귀 서흥	무장대 습격	우익5 사망	B:71~72, e:57, F:845, O:73
	서귀 서흥	무장대 습격	우익1 사망	B:72, O:73
5.26	대정 무릉	인항리 인근 무장대-경찰 전투	경찰 사망14, 부상11	E:53~54
5.27	구좌 하도	무장대 습격	우익3·우가1 사망	B:84~85, e:61
	대정	국경, 대정면 아지트 습격	무장대 무기, 보급품 압수	E:84

	조천 선홍	국경 포위작전	무장대 간부2 피검	E:86
5.28	대정 무릉	무장대 무릉2구 우익 공격	우익3(여성 포함) 사망	E:54
5.29	제주 도련	무장대 습격	경가5 사망	C:43~44
하순	중문	무장대 우익인사 공격	면내 우익6 사망, 부상2	E:56
	대정	국경, 무장대 공격	유격1 사망	E:84
6월	안덕 화순	무장대 습격	면사무소 방화	d:294,E:55, P:277
6.6	한림 금악	무장대-저지서 경찰 전투	경찰2 사망	E:50
6.7	제주 오등	국경, 무장대 아지트 습격	유격3 피검	E:85, f:853
6.10	중문 도순	무장대 습격	우익1 사망	E:56, F:858
6.11	제주 삼양	무장대 습격	우익 및 가족 7 살해	G(1999.8.28)
6.13	제주	국경, 제주읍무장대아지트 습격	무장대 무기 다수 압수	E:85, F:860
6.14	제주 월평	국경 작전	무장대 연락원2 피검, 석방	E:86
6.15	안덕	무장대 창천리, 상창리 습격	각 우익1 사망	E:55
6.16	조천 북촌	포구 정박 경찰 공격	경찰2 사망, 주민13 납치, 이후 구출	B:93~96 E:71, F:877
	제주 월평	국경 작전	유격2 피검, 석방	E:86
6.17	애월	국경, 애월면 아지트 습격	피해 없음	E:85
6.18		11연대장 박진경대령 암살		B:195~220
	조천 선홍	국경 작전	무장대 도사령부 간부1 피검,	E:86
6.20	대정 구억	무장대 우익 납치	우익 형제 납치 살해	B:60, E:53
6.21	조천 대흘	국경, 대흘리 아지트 습격	무기, 탄환 압수	E:86, f:866
6.28	중문	경찰, 무장대 아지트 습격	유격1 사망	E:57
6.29	서귀	국경, 무장대 아지트 습격	피해 없음	E:84
6.30	대정 무릉	우익 목사(고산 출신) 습격	우익1 사망	E:54
하순	중문	우익 인사 습격	우익1 사망	E:56
7.초	제주 월평	국경 작전	무장대 연락원 피검, 석방	E:85
	조천 신촌	경찰 작전	유격4 피검, 무기 압수	E:86
7.2		경비대 7명 탈영 입산		D:339, F:877
7.4	대정	국경, 대정 아지트 습격	해경, 국경 탈출병 각1 피검	E:84
7.9	제주 월평	우익 인사(스파이) 습격	주민2 사망	E:39

<표3>과 <표5>를 살폈을 때, 5·10선거까지의 한 달 남짓한 기간의 활동이 그 이후의 두 달 남짓한 기간의 활동보다 오히려 두 배 정도 가까이

활발했다. 5·10단선반대라는 명분을 일부 달성한 이후 무장대의 마을 습격과 우익인사에 대한 테러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다. 특히 6월 중순 이후에는 초기에 활발히 전개되었던 무장대에 의한 경찰지서 습격이나 우익인사에 대한 공격도 없었다. 다만 우발적 성격의 납치가 1회 있었을 뿐이다. 이 외에는 지하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몇 차례의 충돌뿐이었다. 소강국면을 맞이한 것이다. 이는 남로당이 해주인민대표자회의 대의원 선출을 위한 지하선거에 몰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시기 지역별 활동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6>지역별 활동 현황(1948. 5. 11~7. 9)

구분	지서·마을습격	전투	기타	계
제주읍	5		1(1)	6(1)
애월면				
한림면	5	1(1)		6(1)
대정면	5(1)	1(1)	1(1)	7(3)
안덕면	3(1)	1(1)		4(2)
중문면	5(1)			5(1)
서귀면	2			2
남원면		1(1)		1(1)
표선면	1			1
성산면	1			1
구좌면	7(5)			7(5)
조천면	3			3
계	37(8)	4(4)	2(2)	43(14)

2. 주요활동

「투쟁보고서」에는 봉기 목적을 ①당의 조직수호와 방어의 수단 ②단선단정 반대 구국투쟁의 방법으로 무장반격을 전개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¹⁰⁹⁾ 이 목적은 무장대가 행동을 개시하면서 살포한 포고문에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布告文¹¹⁰⁾

우리 人民解放軍은 人民의 權利와 自由를 完全히 保障하고 人民의 意思를 代表하는 人民의 나라를 創建하기 爲하야 單選單政을 죽임으로써 反對하고 賣國의인 極惡反動을 完全히 肅清함으로써 UN朝鮮委員團을 國外로 모라내고 兩軍을 同時 撤退시켜 外國의 干涉 없는 南北統一의 自主的 民主主義 政權인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의 樹立될 때까지 斗争한다.

一. 人民解放軍의 目的達成에 全的으로 反抗하고 또 反抗할여는 極惡反動分子는 嚴罰에 處함.

一. 人民解放軍의 活動을 妨害하기 爲하야 賣國의인 單選單政을 協力하고 또 極惡反動을 協力하는 分子는 反動과 같이 取扱함.

一. 親日派 民族反逆徒輩이 謀略에 빠진 良心의인 警官, 大靑員은 急速히 反省하면 生命과 財產을 絶對的으로 保障함.

一. 全人民은 人民의 利益을 代表하는 人民解放軍을 積極 協力하라.

右와 如히 全人民의게 布告함.

四二八一年 四月 十日
解放地區完全地帶에서
人民解放軍 第五聯隊

109) 문창송 편,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 앞의 책, 17쪽.

110) 박서동 채록·정리, 『영원한 우리들의 아픔 4·3』, 월간관광제주, 1990, 내지 사진.

따라서 무장대의 무장봉기 초기 활동의 핵심은 「투쟁보고서」가 밝히고 있듯이 탄압세력, 특히 악질경찰과 서청에 대한 반격과 5·10단선의 저지였음을 알 수 있다.

1) 탄압에 대한 저항

<표4>를 보면 4월 3일부터 약 18일간의 작전기간에 지서를 공격한 횟수는 18회다.¹¹¹⁾ 특히 4월 3일에만 제주도 전체 14개 지서 중 12개 지서를 습격함으로써, ‘극악반동 숙청’이라는 그들의 목적을 본격화 하였다. 경찰·서청 등 탄압을 가하는 세력에 대한 공격은 많은 지지와 호응을 받았다. 그것은 단기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주4·3사건의 전개과정 내내 시행된 것이었다. 또, 무장대의 투쟁기록에도 ‘악질 서청에 대한 숙청’은 자세히 부연설명하고 있을 정도로 서청에 맺힌 민중의 분노를 대변하고 있다.

그 때 누군가 “어느 날 우리는 일어난다. 일어나면 그 때 원수를 갚자”고 나한테 와서 항상 그런 말을 했어. 그때 경찰이라면 이를 박박 갈았지. 눈앞에 있으면 찢러 죽일 생각밖에 안 날 때라.”¹¹²⁾

2) 5·10 단선 반대

이 기간 활동의 핵심은 5·10단독선거의 저지였다. 4월 3일을 봉기일로 결정한 것도 5·10선거를 위한 선거인 등록이 3월 30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¹¹³⁾ 이 같은 지향점은 당시 5·10선거를 통해 38선 이남 지역 내에

111) 마을 습격 중 지서를 공격하여 피해를 입힌 2회를 포함한 숫자임. 그런데 횟수가 반드시 날짜를 달리하거나, 습격한 부대가 다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 마을에 습격하여 지서도 공격하고 우익인사도 습격할 수 있으며, 한 부대가 시간을 달리하며 여러 마을을 습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12) 제주4·3연구소, 「증언, 내가 겪은 4·3」, 『4·3長征 6』, 나라출판, 1993, 69쪽.

113) 박명림, 「제주도4·3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서 반공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미군정과 국내 단선지지파들과의 정면충돌을 예고하는 것이었다.¹¹⁴⁾

이러한 무장대의 슬로건에 민중들은 호응했다. 후방에서는 “여중생들이 수시로 성금을 모아 산으로 올려 보냈고, 성금을 내지 못한 학생들은 미안해 할 정도였다. 또 여성동맹원들은 쌀과 양말을 보냈고, ‘가난한 사람 편에서 공평한 삶을 건설하자’는 주장에 공감해 ‘정의로운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졌던 학생들이 스스로 입산해서 선전물을 만드는 등 무장대의 활동을 지원”¹¹⁵⁾했다. 무장대는 당과 더불어 5·10선거를 거부하기 위해 적극적인 방해공작을 펼쳤으며, 선거관련업무 종사자들에게 집중적인 테러를 가했다. 이러한 공격은 선거관리위원들이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투표소로 옮기는 일을 거부하게 했으며¹¹⁶⁾ 급기야 선거관리위원들이 선거관련 업무를 지속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며 사퇴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했다.¹¹⁷⁾ 또한 ‘설득’¹¹⁸⁾, ‘폭력과 위협’¹¹⁹⁾을 동원해 투표거부를 위한 주민들의 입산을 주도했다. 여기에 ‘똥지 모를 중압감’¹²⁰⁾과 ‘적극적인 자발성’¹²¹⁾에 의한 투표거부 행렬이 가미되어 끝내 제주도의 3개 선거구 중 2개 선거구의 투표를 무효화 시켰

1988, 77쪽.

114)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168쪽.

115)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4권, 232~237쪽.

116) USAFIK, 6th Infantry Division, G-2 Periodic Report(No. 918, 1948. 4. 24)

117)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자료집 7, 미국자료편②』, 2003, 44쪽.

118) 제민일보4·3취재반, 『4·3은 말한다』 2권, 전예원, 1994, 207쪽.

119)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자료집 9, 미국자료편③』, 2003, 23쪽의 보고는 다음과 같다. “4월에 공산주의자들이 선동한 폭력행위는 주로 5·10선거의 선거인 등록을 저지하는 시도에 맞춰졌다. 제주도에서 일상적인 다른 사건들처럼 마음에 쌓인 불평이 타올랐다. 선거 등록사무소에 대한 습격이 이뤄졌고, 주로 선거인 등록자들이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위협과 함께 등록명부가 도난당했다. 이밖에도 상당한 양의 위협 서한을 보내고 가능한 많이 공개 시위를 벌이면서 선관위원과 후보자들에 대한 폭행과 살인도 자행됐다.”

120) 화북동, 『禾北洞郷土誌』, 1991, 147쪽.

121) 朴東雨(당시 한림면 민청 부위원장)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5월 7일 친구들의 5·10 단선 반대 캠페인에 동참하자는 권유를 받고 입산했습니다. 단독선거 하면 남북분단이 되므로 보이콧해야 한다는 명분도 있었지만 경찰 등의 횡포로 감정이 고조되어 있었기 때문에 입산하게 된 것이지요. 처음엔 명월의 한 민가에서 지내다가 문수동, 귀덕4구 등으로 옮겨 다니면서 생활했습니다.”(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3권, 169쪽, 재인용)

다.

5·10단선 거부와 무장대 활동과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서는 4·3붕기 발발 이후부터 5월 10일까지의 활동을 살펴봐야 한다. 더욱 주목할 시기는 단선거부를 위한 입산이 시도되었던 5월 7일¹²²⁾부터 선거일인 5월 10일까지 무장대의 활동이다. <표3>을 보면 이 기간 동안 무장대가 마을을 습격한 횟수는 수차례에 불과하다. 미군정보고서에서도 5월 10일을 전후해서 ‘제주도에서의 선거 폭력’에 대해 여러 차례 보고¹²³⁾하고 있지만, 5월 10일 투표소 공격이 5회에 그치고 있다.¹²⁴⁾ <표3>에서 확인되듯이 무장대가 모든 마을에 위협을 가한 것도 아니었다.

5·10단선 저지를 위한 격렬한 저항은 비단 제주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남한 곳곳에서 선거 저지를 위한 습격과 테러가 가해졌으며, 초보적인 무장투쟁의 형태를 띠는 곳도 있었다.¹²⁵⁾ 하지만 투표가 거부된 곳은 제주도뿐이었다.

과연 이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표3>의 5월 10일 상황을 보자. 무장대의 선거방해를 위한 투표소 기습은 남제주군에 집중되었고, 북제주군 지역은 1~2지역에 불과했다. 하지만 남제주군은 선거가 성공했고 북제주군은 실패했다. 당시 선거가 무효화 된 북제주군의 선거구별 투표상황은 다음과

122) 5월 7일 전후로 투표 거부를 위한 입산이 시작됐다.(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자료집 8, 미국자료편③』, 2003, 234쪽)

123) HQ USAFIK, G-2 Periodic Report(No. 831, 1948. 5. 11 보고)

<표> 선거폭력에 관한 보고(1948. 5. 7~5. 11)

	사 망	부 상	실 중	방 화	습 격
경 찰	1 명	21 명	4 명		
우익인사	14 명	5 명			
공산주의자	21 명				
주 택				22 채	
투표소					1 곳

(주) 위 보고서의 신뢰도는 A-1부터 F-6까지임.

124) HQ USAFIK, G-2 Periodic Report(No. 832, 1948. 5. 12)

125) 김점곤, 『韓國戰爭과 南勞黨戰略』, 박영사, 1973, 95~118쪽 참조.

같다.

북제주군 갑구 : 선거구수 73개소 중 31개소만이 투표 실시.

등록인 27,560인 중 투표인 수는 11,912인.

북제주군 을구 : 선거구수 61개소 중 32개소만이 투표 실시.

등록인 20,917인 중 투표인 수는 9,724인.¹²⁶⁾

이 투표상황을 보더라도 무장대의 테러와 제주도민들의 투표참여 여부는 커다란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

해방 직후 열기는 일생 중 가장 뜨거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곧 마을의 지도자가 나타났고 이들에 대한 주민들의 신망은 두터웠습니다. 이들의 지도로 신탁통치 관련 데모를 했지요. 난 어리고 배우지 못해 신탁통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지도자가 옳다고 하니 따랐습니다. 5·10선거 반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강제로 산에 간 것이 아니고 주민 모두가 자연스레 따른 겁니다.¹²⁷⁾

따라서 제주도에서 5·10단선이 거부된 것은 ‘5·10단선단정 반대 투쟁을 총지휘한 남로당’¹²⁸⁾의 승리나 ‘5월 10일의 선거를 좌절시킬 목적으로 한 공산주의자들의 부분적인 성공’¹²⁹⁾이 아닌, 제주도민이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선택한 결과로 해석해야 한다. 또, 이러한 선택의 동기가 됐던 것은 단기간의 선전선동이나 위협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해방 이후 제주도민이 늘 품어왔던 ‘하나의 민족이 둘로 갈라설 수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꿈’ 때문이었다. 이러한 제주도민의 바람을 조직화 하고 엄호한 ‘남로당제주도위원회’가 봉기 목적을 부분적으로 달성한 것이었다. 남로당은 좌파적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지향했겠지만, 제주도민은 ‘통일된 민주정부’를 원

126) 『조선일보』(1948. 5. 20)

127) 김종수(98년 69세. 한림읍 귀덕리)의 증언(제민일보, 1998. 9. 18)

128) 대검찰청, 『좌익사건실록』, 제1권, 392~394쪽.

129) 주한미군사(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자료집 8, 미국자료편②』, 2003, 221쪽)<남조선과도정부 활동>제31호.

했던 것이다. 이러한 염원과 지향이 배합되어 ‘미국 점령정책의 최종적 귀결이었던 5·10단독선거’가 거부된 것이다.

3) 반미투쟁

김봉현·김민주는 제주4·3사건이 반미구국투쟁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 외 많은 연구자들이 이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필자는 당시 ‘미국 점령정책의 최종적 귀결이었던 5·10단독선거’¹³⁰⁾를 거부하고 파탄 내겠다는 슬로건과 미군정 정책에 의해 유지되는 치안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선동과 직접적인 행동 자체가 ‘반미투쟁’이었음은 동의하지만, 실질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다. 그 이유는 첫째, 「투쟁보고서」의 조직면, 작전면 등 어느 곳에도 미군을 적대시하거나 반미투쟁을 암시하는 문구가 없다. 둘째, 실제 실행에 옮겨졌던 미군에 대한 공격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있다. “4월 24일 제주비행장을 이륙하던 C-47기 1대가 저격당하고, 미군정청 내의 PX 건물이 파괴되었다”¹³¹⁾거나, “미군 활주로에 진입하던 한국인이 미군의 사격에 의해 부상당하고, 같은 날 밤 미군 초병 1명이 의식을 잃을 정도의 테러를 당했다.”는 미군의 정보보고¹³²⁾는 있는데, 무장대의 활동보고에 없다는 것은 의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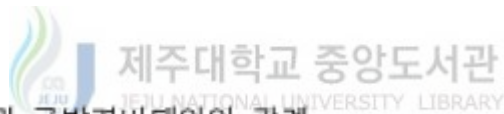
미군을 주요 타격대상으로 설정했다면 자신들의 활동내용을 과시하기 위해 오히려 성과를 부풀려서라도 기록했을 텐데, ‘미군에 대한 공격’이 보고서에는 누락되어 있다. 이는 실제 그 공격이 무장대에 의한 습격이 아니라, 어떤 돌발적인 상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미군정보보고서에는 이후 조치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미군정이

130) 박명립, 「제주도4·3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88, 77쪽.

131) HQ USAFIK, G-2 Periodic Report(No. 818, 1948. 4. 26)

132) HQ USAFIK, G-2 Periodic Report(No. 879, 1948. 7. 8)

점령지역에서 자국 군대가 피습당한 사실을 놓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 미군의 보고가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공격을 당했다’고 보고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반미구국투쟁’은 상징적인 구호였었는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조선을 강탈하려는 미군을 몰아내자”¹³³⁾는 선동적인 뼈라와 “노획된 공산주의자들의 문서에 의하면, 현재 공산주의자들을 분리하기 위하여 해안지역을 수색하고 있는 한국 경비대를 미군이 지원할 경우 미국인에 대한 공격을 명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당시 미국 현지의 신문보도 등은 이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¹³⁴⁾ 하지만 그 이상 미군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없었다. 따라서 당시 봉기 지도부는 ‘반미’는 상징화 된 구호로 내세우고 직접적인 실행은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 즉, 미군을 직접 선제공격해서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득이 없다는 방침을 세웠던 것이라 볼 수 있다.



3. 초기 활동과 국방경비대와의 관계

1) 남로당의 국방경비대 세포침투 및 지도

해방 직후 자체적으로 무장력을 갖추려던 좌익진영의 의도는 미군정이 1946년 1월 사설군사단체를 해산시키는 조치를 취하자, 경비대와의 침투공작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¹³⁵⁾ 이에 따라 남로당제주도위원회는 1947년¹³⁶⁾ 3월 경비대 제9연대의 제1차 모병에 고승욱, 문덕오 등 4명의 남로당

133) HQ USAFIK, G-2 Periodic Report(No. 601, 1947. 8. 8)

134) 『뉴욕타임즈』(1948. 5. 3),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자료집 11, 미국자료편⑤』, 2003, 200쪽, 재인용.

135) 김점곤, 『한국전쟁과 남로당전략』, 박영사, 1973, 173~174쪽.

원을 국방경비대¹³⁷⁾에 프락치로 입대시켰다.¹³⁸⁾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지도(指導)문제와 활동방침에 대한 지시를 1947년 5월부터 전남도당에 수차례에 걸쳐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제주도당은 이를 포기할 수 없어 독자적으로 선(線)을 확보해 대정면당을 통해 정상적(經常的)인 연락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1명은 일본으로 도피해버렸고 1명은 조직에서 이탈”¹³⁹⁾했다. 이로 미루어 9연대에서의 사병 침투는 세밀한 계획에 의한 조직적인 침투라고 보기엔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이는 전국적인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즉, 1947년 5월 미소공위 재개에 맞춰 남로당은 대대적인 조직 확대 운동을 전개하는데, 이 과정에서 남로당의 군내(軍內)조직도 능률적이고 기능적이며 정예주의에 입각한 질적 엄선주의보다 양적인 확대를 꾀한 결과 조잡하고 비기능적인 군내조직이 되고 말았다. 때문에 다원화된 조직 간의 비협동과 부조화를 면치 못해 소위 ‘군내당(軍內黨)’을 조직하지는 못한 상태였다.¹⁴⁰⁾ 제주도내에서 9연대에 침투시킨 프락치에 대한 전남도당의 지도가 장기간 방치된 것도 여기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남로당의 군부침투전술이 장교와 사병을 다르게 접근¹⁴¹⁾하고 있

136) 원문에는 ‘1946년 3·1 및 3·10투쟁 직후’라 표기했으나 3·1사건은 1947년의 일이다.(같은 책 주석 표기, 75쪽) 또한 조선경비대 제9연대의 1기생 모집은 1947년 3월에 이루어졌다.(제민일보4·3취재반, 앞의 책, 1권, 1994, 175쪽)

137) 「투쟁보고서」에 ‘국경(國警)’으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경비대(이하 경비대 혹은 국경)’라 칭한다. 1946년 1월 15일 ‘조선국방경비대’(총사령관 마살 중령)를 창설한 미군정은 그 예하에 향토연대를 창설하기 시작했는데, 제주도에는 1946년 11월 16일 조선경비대 제9연대가 모슬포에서 창설되었다.(제민일보4·3취재반, 앞의 책 1권, 176~177쪽)

138) 문창송 편,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 앞의 책, 19쪽, 75쪽.

139) 앞의 책, 75쪽.

140) 김점곤, 『한국전쟁과 남로당전략』, 박영사, 1973, 180~181쪽.

141) 金雲石, 『北韓備集戰術文獻集』, 韓國亞細亞反共聯盟, 1957, 469쪽.

1)장교의 침투수단은 다음과 같다. ①실력으로 사관학교에 입교하여 임관되는 방법 ②추천으로 입교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정부, 군, 정계의 유력인사를 이용하여 추천을 받게 한다. ③공산당 수뇌가 군내당조직에게 추천하여 사관학교에 입교 침투시키는 방법 ④사관학교 직원으로 있는 세포를 이용하거나 혹은 그들을 매수하여 입교시킨다. ⑤기성장교의 신원과 인적 배경을 조사하여 접근의 소지나 잠재성분을 내재한 자를 포섭하는 방법 ⑥기성 장교들의 대인관계와 지연, 혈연, 인연, 동기 동창관계 등 한국의 토착적인 바탕을 이용하여 포섭공작을 확대시키는 방법. 2)사병(士兵)에의 침투

듯이 침투공작 또한 중앙당과 산하 도당이 역할분담 체계였다. 즉, 장교와 사병에 대한 두 공작부대가 중앙당특별부에 병립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장교에 대한 공작만을 중앙당에서 직접 책임졌었고, 사병은 도당(道黨) 군사부에서 공작을 위임받아 침투시키는 이원적 방법을 사용했다.¹⁴²⁾ 그럼에도 4·3봉기 직전 경비대 동원 실패의 원인을 조사하면서 ‘9연대에 이원적 세포조직이 있음을 처음 접했다는 듯한 보고’¹⁴³⁾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2) 경비대의 초기 대응

5·10총선거를 앞두고 단선 지지파와 반대파 사이에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면서 전국적으로 무력충돌이 빈번했기 때문에 제주도의 무장봉기 또한 미군정은 ‘치안상황’으로 간주하였다. 미군정은 무장봉기가 발생하자 4월 5일 전남 경찰 약 100명을 응원대로 편성해 급파하는 동시에 제주경찰감찰청 내에 제주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해 사령관으로 경무부 공안국장 김정호를 파견했다. 또, 제주해안을 봉쇄하고 계속하여 국립경찰학교 간부후보생 100명과 서청 단원과 대동청년단 단원들도 특파했다.¹⁴⁴⁾

반면 봉기 초기 경비대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다. 경비대 제9연대는 이 사건을 제주도민과 경찰·서청간의 충돌로 간주했다. 서울의 경비대 수뇌부(통위부장 송호성)도 제주도 상황을 치안상황으로 보고, 그 진압에 군이 개입할 성질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¹⁴⁵⁾ 당시 전국적으로 벌어졌던 군·경

공작수단은 다음과 같다. ① 부락에서 당성이 강하고 성분이 좋은 분자를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입대케 한다. ②좌익계활동에서 노출된 자들을 단위 당-리, 면, 군, 도-을 거쳐 각 부대의 조직책에게 추천하여 침투시킨다. ③경찰과 적대관계나 혹은 반감이 있는 자들을 입대시킨다. ④기성 사병에 대하여 부대 내에서 조직에 가담하고 있는 장교나 하사관으로 하여금 포섭케 한다. ⑤조직에 직접-정식으로-가입시키지 않더라도 접근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병들에 대하여 조직에 있는 지휘관이나 하사관 혹은 동료로 하여 인간적인 관계의 형성으로 그들로 하여금 감화(感化)되게 하여 ‘동정’, ‘동조’케 한다.

142) 김점곤, 앞의 책, 179쪽.

143) 문창송 편,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 앞의 책, 19쪽, 76~77쪽.

144)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188~189쪽.

간의 갈등도 경비대의 출동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군인들은 경비대가 향후 창설될 국군의 모체로 생각했으나, 경찰은 경찰예비대(警察豫備隊)라는 인식에서 경비대를 무시했다. 이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경비대원과 경찰간에 마찰이 빚어졌고, 무력충돌로 사상자를 내기도 했다.¹⁴⁶⁾ 게다가 경비대 9연대 장교와 사병들은 제주도에서의 경찰과 서청의 무자비한 횡포에 대한 정보로 인해 의분을 품고 있는 상황이었다.¹⁴⁷⁾

그러나 사태가 점점 악화되자 모슬포에 주둔하던 경비대 제9연대는 10명 미만의 특별부대(부대장 김용순 대위)를 파견했다. 하지만 이것은 진압작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비치안’을 위한 것이며, 경비대는 군의 출동 목적을 정부의 재산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확수(確守)하기 위한 것임을 거듭 밝혔다.¹⁴⁸⁾

앞서 살폈듯이 무장봉기 발발 이후 경비대의 무대응은 남로당의 프락치 공작과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었다. 그것은 5·10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벌어진 무력충돌의 하나라는 미군정의 인식에서 비롯됐다. 제주도 미군정장관 맨스필드 중령, 제주주둔 9연대장 김익렬 등도 경찰과 도민과의 갈등에서 기인한다는 판단¹⁴⁹⁾을 하고 있었다. 또, 경비대의 열악한 조직과 무기¹⁵⁰⁾도 초기 9연대의 대응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었을 것이다. 더욱 분명한 것은 군조직의 특성상 하급 장교나 사병들에 의해서 연대규모의 작전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4·28회담

5·10선거를 앞둔 제주지역 상황은 9연대장 김익렬과 무장대 사령관 김

145) 장창국, 『陸士卒業生』, 중앙일보사, 1984, 115~116쪽.

146) 한용원, 『創軍』, 박영사, 1984, 134쪽.

147) 김익렬 유고(遺稿), 「4·3의 진실」, (제민일보4·3취재반, 앞의 책 2권, 1994, 292~293쪽)

148)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190쪽.

149) 김익렬, 앞의 글(제민일보4·3취재반, 앞의 책 2권, 1994, 355쪽)

150) 김익렬, 앞의 글(제민일보4·3취재반, 앞의 책 2권, 1994, 276~277쪽, 297쪽, 305~306쪽)

달삼간의 '4·28회담' 전후로 미군정이 9연대에 토벌작전 참여를 명령하면서 변화를 겪는다. 4월 17일 제주주둔 미군정장관 맨스필드 중령을 통해 9연대의 진압작전 참여를 명령한 미군정은 4월 20일 부산의 제5연대 1개 대대를 제주로 파견토록 했다. 또, “대규모 공격에 임하기 전에 소요집단의 지도자와 접촉해서 항복할 기회를 만들며, 붙잡힌 포로들은 경찰에 인계하지 말라”고 지시한다.¹⁵¹⁾ 이 명령을 받은 맨스필드 중령은 5연대 1개 대대와 함께 제주에 주둔한 드루스 대위 그리고 김익렬 연대장과 협의를 거쳐 제1단계 작전으로 무장부대와 도피한 일반 주민을 분리하기 위해 ‘화평·귀순 공작’을 펼치기로 하고 회담을 추진한다.¹⁵²⁾

한편 남로당 군사부책임자 무장대 사령관인 김달삼은 김익렬 연대장이 사건을 평화적으로 수습하려 한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교묘히 이용하면 경비대의 토벌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¹⁵³⁾에 따라 회담에 응했다.

하지만 4·28회담의 결과에 대한 해석은 각각 달랐다. 먼저 김익렬은 “즉각 전투중지 및 무장해제 등을 합의하고, 무장대가담자의 자수 및 도피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고 합의했다”¹⁵⁴⁾고 했으나 「투쟁보고서」에는 “금번 구국항쟁의 정당성과 경찰의 모략 등에 의견의 일치를 보아 김연대장은 사건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¹⁵⁵⁾고 했다.

김익렬의 주장대로라면 무장대는 '5·10단선 거부'라는 일차적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한 번 하지 않고 사실상 투항한 꼴이 된다. 하지만 그것은 4·28회담을 전후하여 어떠한 작전상의 변화나 조직체계상의 변화가 없었다는 「투쟁보고서」의 조직면과 작전면을 훑어봐도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151)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191쪽.

152) 김익렬, 앞의 글(제민일보4·3취재반, 앞의 책 2권, 1994, 308~309쪽).

153) 문창송 편,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 앞의 책, 19쪽, 78쪽.

154) 김익렬, 앞의 글(제민일보4·3취재반, 앞의 책 2권, 1994, 329쪽)

155) 문창송 편,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 앞의 책, 19쪽, 78쪽.

4) 박진경 연대장 암살

이 시기에서 주목할 점은 무장대가 11연대 박진경연대장의 암살을 추진했다는 대목이다. 즉, 5월 10일 군책(軍責) 김달삼과 국경측에서 오일군 대대장 등이 참가한 회담에서 “미군정과 통위부의 전면 포위작전이 실행되면 투쟁이 실패하므로 적극적인 사보타지 전술과 함께, 대내(隊內) 반동의 거두 박진경 연대장 이하 반동 장교들을 숙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적고 있다.¹⁵⁶⁾

박진경 연대장은 1948년 6월 18일, 부하 장병의 총격에 암살됐다. 장기간의 수사에 의해 문상길 중위, 손선호 하사를 포함해 8명의 경비대 사병이 관련자로 체포됐다. 이들 중 군사재판을 거쳐 문상길 등 4명이 군사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¹⁵⁷⁾ 그런데 문상길은 김달삼과 두 번 만난 것은 인정하면서도, “김달삼이 ‘30만 도민을 위해 박대령을 살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을 뿐 아무런 지령이 없었다. 김달삼과 두 번 만난 것은 30만 도민을 동족상잔으로부터 건지기 위하여 경비대의 근본이념 국가지상 민족지상의 정신으로 원만해결책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변했다.¹⁵⁸⁾

하지만 문상길이 김달삼과 회동을 갖고 그에 대한 의견교환을 했다는 점, 그리고 「투쟁보고서」의 작전면에서도 ‘대내(隊內) 최고 악질반동 박진경연대장 암살공작 추진’¹⁵⁹⁾이라는 기록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무장대는 박진경연대장의 제거를 위해 조직적인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156) 앞의 책, 79~80쪽.

157) 정동웅, 「動亂 濟州의 새 悲劇-朴大領 暗殺犯 裁判記」, 『새한민보』 (1948. 10. 상순)

158) 『서울신문』 (1948. 8. 13)

159) 문창송 편,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 앞의 책, 33쪽.

5) 9연대 침투 세포들의 활동

앞서 지적했지만 군조직의 특성상 하급 장교나 사병들에 의해서 연대규모의 작전이 결정되지 않는다. 더욱이 미군정 하의 군 조직임을 감안하면 그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 1948년 5월 24일 경비대의 작전에 의해 두모리에서 연락원이 피검되기 이전까지 무장대와 경비대 간에 별다른 충돌이 없었다. 그것은 애써 충돌을 회피한 무장대의 전술이 그 원인이었다. 이 전술이 가능한 것은 경비대내의 세포 혹은 동조자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

군인들이 토벌 온다고 할 때 그 속에 조직이 있기 때문에, 간혹 연락 없이 올라올 때도 있지만 대개 미리 연락이 왔어. 어느 코스를 향해서 행동할 거니까 자기네를 쏘지 말라고 하거든.¹⁶⁰⁾

이에 대한 내용은 제주도를 취재했던 조선통신 특파원 조덕송이 「신천지」(1948년 7월호)에 쓴 「현지보고, 유혈의 제주도」에도 기록되어 있다.

한라산에 할거하고 있는 소위 폭도들은 경비대를 절대 적대시 않는다고 한다. 경비대 장교의 말을 빌리면 경찰이라 하면 생사를 결단하고 덤비는 폭도들이 경비대에 대해서는 양민이 되어버린다고 한다. 총이나 칼을 쥐고 파수를 보고 섰던 폭도들도 경비대가 접근하면 총칼을 감추고 일하는 농부가 되고, 집단으로 왈(曰) 빨치산전을 전개하고 있던 조직부대도 대군의 경비가 나타나면 종적을 감추어버린다고 한다.

무장대는 “경비대가 토벌에 나서는 상황을 성패의 갈림길”¹⁶¹⁾로 보고 가능한 충돌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김달삼은 무장대에게 절대로 경비대하고는 적대행위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도처에 경비대 환영이라는 표어를

160) 제주4·3연구소, 「증언, 내가 겪은 4·3」, 『4·3長征 6』, 나라출판, 1993, 79쪽.

161) 문창송 편,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 앞의 책, 79쪽.

부치는 환대까지 하였다. 무장대의 적은 경찰과 서청이기 때문에 경비대는 중립을 지키라는 요구였다.¹⁶²⁾

이와 같은 상황은 제주과건 응원대 및 서청의 횡포에 대한 9연대 사병들의 ‘의분(義憤)’¹⁶³⁾과 결합되면서 상승작용을 일으켰다. 「투쟁보고서」에도 “5월 24일 화순지서 습격 시 지서를 완전 포위하여 돌격 직전에 동쪽으로 공차(空車)가 옴을 국경차(國警車)로 오인하여 퇴각했다”고 적고 있으며,¹⁶⁴⁾ 비슷한 기록은 경비대의 토벌이 한층 강화된 6월 28일 중문면(中文面)의 기록에도 보인다.¹⁶⁵⁾

5) 국방경비대 탈영이 무장대의 초기 활동에 미친 영향

(1) 병력상의 증가

국방경비대원들의 계속되는 탈영과 무장대로의 합류는 제주4·3사건의 전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 중에도 병력의 증가에 미친 영향은 상당했다.

<표7>국방경비대원 탈영 및 지원일지¹⁶⁶⁾

일일	내 용	비고
3.25	한림면에서 해안경비대 1명 99식총 5정 가지고 탈영. 이후 해안경비대에서 조면탄통 1정, 탄환 7발 지원.	
4.중	경비대로부터 99식총 4정, 카빈 탄환 1,615발 지원.	
5.중	5연대 통신과 신호탄 5발 지원.	
5.17	5연대 오일군대대장 M1 2정·탄환 1443발, 카빈 2정·탄환 800발 지원.	
5.20	9연대 사병 최상사 이하 43명 99식총 1정씩과 탄환 14,000발을 가지고 탈영.	이때 연락이 안된 이유는 상호

162) 군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I』, 1967, 440쪽.

163) 김익렬 유고(遺稿), 「4·3의 진실」, (제민일보4·3취재반, 앞의 책 2권, 1994, 292~293쪽)

164) 문창송 편,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 앞의 책, 55쪽.

165) 앞의 책 57쪽.

166) 앞의 책, 80~83쪽.

	대정지서 습격 경찰4명, 급사(給仕) 1명 살해하고 입산 시도. 22명 피검, 나머지 대원 21명 4~5일 후 연락 됨.(이 때 각각 99 식총 1정씩과 탄환 100발씩 남아 있었음)	연락방법 차이 때 문임
5.21	서림수원지 초병 2명 99식총 3정 가지고 탈영.	
5.말	애월면 주둔 5연대 사병 4명, 각각 M1 1정씩 가지고 탈영.	
5.31	9연대 고승옥 상사 등 7명 카빈 1정, 99식총 7정을 가지고 탈영.	
6.초	문덕오 상사 99식총 1정 가지고 탈영.	
6.20	대정면에서 해안경비대 1명 99식총 2정 가지고 탈영.	
7.1	서림수원지 초병 10명 99식총 11정 가지고 탈영.	
7.12	9연대 사병 1명 99식총 1정 가지고 탈영.	
7.14	9연대 사병 2명 탈영. 이중 1명 도주.	
7.18	6연대 이정우, 오전3시 박진경 11연대장 암살 후 M1 1정을 가지 고 탈영.	주 ¹⁶⁷⁾
7.24	9연대 사병 1명 99식총 1정·탄환 10발 가지고 탈영.	
7.초	1명 M1 1정 가지고 탈영.	
합계	-탈출병수 52명(피검된 22명과 도주한 1명 제외) -무기 총 : 99식총 56정, 카빈 3정, M1 8정. 합계 67정 -탄환만의 공급 M1 1,443발, 카빈 2,415발. 합계 3,858발 -기타 무기 조명탄통 1정·탄환 7발, 신호탄통 5개	주(註). 전기 탈 출병 52명 중, 그 후의 국경(國 警) 작전에 의하 여 1명 피살, 3 명 피검되고 현 재 48명이 인민 군에 편입되고 있음.

이를 종합하면 해안경비대 포함 75명의 사병이 탈출했으며, 이 중 25명이 피검되고 1명이 사살됐으며 1명이 도주하여 1948년 7월 말 현재 48명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안경비대원의 탈영 입산은 이채를 띄는데, 이에 대한 증언을 살펴보자.

내가 모슬포지서에 근무할 때 전재평이 탈영한 사건을 직접 겪었습니다. 전재평은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재평은 모슬포 주둔 경비대의 식수원인 일과라 ‘서림수원지’를 지키는 분대원이었는데, 그 분대원 전부가 탈영 입산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날 경비 책임자였던 최창선 중사가 온몸에 흙투성이가 된 채 지서로 도망쳐 왔습니다. 최중사의 말인 즉, 마라도 등대를 관리하던 해양경비대원들

167) 편저자는 6월 18일의 오기라 지적하고, ‘작전면 제5차 작전기록 참조’의 주석 표기.

이 찾아와 자신의 분대원들을 이끌고 입산했다는 겁니다.¹⁶⁸⁾

주목되는 것은 남로당의 세포로 남아있던 고승옥, 문덕오 등 2명의 탈영은 9연대의 집단탈영과는 시기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좀 더 많은 수의 경비대 병력을 포섭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탈영자들의 탈영 날짜가 불명확하게 기록된 것은 탈영 날짜와 무장대와 선이 닿은 날짜와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비대의 탈영 소식은 제주도민들에게 무장대측이 강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난 쌀 1되와 돈 30원을 낸 적이 있어요. 그땐 산 쪽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무서워 안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시다. 또 9연대가 입산했다는 소식에 일부는 산 쪽으로 마음이 쏠렸던 것도 사실이지요. 이런 저런 모임을 통해 쌀·소금·돈을 거둬 산에 올렸고 밤엔 회의도 많이 했어요. 주로 처녀들이 산에 심부름도 다니고 물자를 거뒀습시다.¹⁶⁹⁾



(2) 무기 확충

국방경비대의 탈영 및 지원에 의한 무기 확충 상황은 위의 <표7>과 무장대가 작성한 「전도 면별 전과 일람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기간의 지서습격 등에 의한 노획무기 특히, 총기는 26정에 불과했다. 봉기 초기 확보한 30정을 합해도 60정이 채 안 되는 총기였다. 따라서 다수의 총기는 경비대 병사들이 입산하면서 보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표7>을 보더라도 경비대 병사가 탈영하면서 67정을 보충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4·3봉기의 진행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총기를 소지할 수 있었던 120명 정도의 무장대원들이 한 명당 총기 한 정씩을

168) 이상봉의 증언(제민일보4·3취재반, 『4·3은 말한다』 제5권, 216쪽, 재인용)

169) 이춘형의 증언(제민일보4·3취재반, 『4·3은 말한다』 제5권, 234쪽, 재인용)

보유하게 된 시기는 경비대 사병의 탈영이 지속돼던 7월 들어서야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표8> 무장대 면별 무기탈취 현황(1948. 3. 18~7. 9)¹⁷⁰⁾

활동내역		합계	제주읍	애월면	한림면	대정면	안덕면	중문면	서귀면	표선면	남원면	성산면	구좌면	조천면
무기탈취	카빙총	13	1	1		2					2		1	6
	카빙총 탄창	5	2	2		1								
	카빙 탄환	209	9	95							55			50
	38식 탄환	800												800
	수류탄	5		1										4
	일본도	4			1									3
	전화기	5				1								4
	철창	15				15								
	철갑	1				1								
	배낭	1				1								
	공기총	1									1			
	44식 총	5											1	4
	99식 총	5												5
	38년식 총	2												2
	황린탄	4												4

170) 「투쟁보고서」의 ‘전도 면별 전과 일람표’(74쪽)를 필자가 재구성 함.

IV. 결 론

본 연구는 「제주도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가 어떠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는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된 것이다. 즉, 「투쟁보고서」가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제주4·3사건 초기 ‘무장대’의 조직과 활동에 대해 파악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첫째, 소위 ‘4·15 도당부대회(島黨部大會)’는 과연 있었는가, 있었다면 어떠한 성격의 회합이 있었는가? 둘째, 무장대는 ‘반미투쟁’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고 있었는가? 셋째, ‘5·10단선 거부’가 무장대(혹은 남로당)와 제주도민에게는 과연 어떠한 의미였나를 면밀히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투쟁보고서」는 어느 정도 신뢰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왜곡되거나 활동상황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에서는 확인 할 수 없는 활동이 기록되기도 했다. 필자는 그 이유를 그들의 활동정보가 상세보고와 대략의 문건·구두보고를 통해 축적되었다가, 김달삼 등이 해주인민대표자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제주를 빠져나가기 직전에 집중적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따라서 「투쟁보고서」는 어느 정도의 신뢰는 구축하고 있지만, 특히 날짜 오기(誤記)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모자란 면이 있었다.

무장대의 조직은 준비가 원활치 못했고 더디게 진행되었지만 무장봉기 이전인 1948년 3월 15일 전후로 무장부대로서 ‘유격대’를 준비했다. 그리고 무장부대로서 ‘유격대’와 후속부대로서 ‘자위대(특무대)’는 엄격하게 구분되었다. 급박한 무장투쟁 국면에서 도당사령부(무장대)는 초기에 잦은 조직체계 변화를 꾀했다. 이는 준비단계에서의 부족함을 조직운용의 경험을 통해 보완한 것이었다. 더불어 유격투쟁이 본격화 되면서 군사부가 눈에 띄게 강

화되고 보급과 정치·군사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 지대(支隊) 편성은 5월말부터 편성되었으며 4개 지대로 무장대가 구성되었다.

초기 무장대의 활동은 그들이 내세운 목표인 “조직의 수호와 방어 그리고 5·10단선단정(單選單政) 반대”를 위한 활동으로 집약되었고, 결국 5·10단선은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 거부되었다.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연구결과 첫째, 소위 ‘4·15도당부대회’는 확인할 수 없는 주장이고, 회합이 없었거나 혹은 일상적인 지도부회의를 통해 어떠한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중앙당이 참여하여 ‘돌발적인 상황’을 조정하고 수습하는 회의라면, 마을 습격이나 우익인사에 대한 습격이 없었을텐데 당일 무장대에 의한 공격이 있었다는 점이다. 더구나 경비대의 해안초소를 공격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더불어 미군정의 각종 정보보고에 관련 정보가 없다는 점, 그리고 「투쟁보고서」에도 그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4·15도당부대회’를 통해 중앙당이 사후 승인을 했다는 주장의 허점을 드러낸다.

둘째, ‘반미투쟁’은 상징적인 구호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투쟁보고서」의 어느 곳에도 ‘반미’를 암시하는 문구가 없을뿐더러, 그들의 봉기 목적에도 ①당의 조직수호와 방어의 수단 ②단선단정 반대 구국투쟁의 방법으로 무장반격을 전개했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봉기 지도부는 ‘반미’는 상징화 된 구호로 내세우고 직접적인 실행은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 즉, 미군을 직접 선제공격해서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득이 없다는 방침을 세웠던 것이라 볼 수 있다.

셋째, 무장대의 활동일지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에서 5·10단선이 거부된 것은 ‘5·10단선단정 반대 투쟁을 총지휘한 남로당’의 승리나 ‘5월 10일의 선거를 좌절시킬 목적으로 한 공산주의자들의 부분적인 성공’이 아닌, 제주도민이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선택한 결과였다. 또,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분위기는 단기간의 선전선동이나 위협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해방 이후 제주도민의 의식 속에 잠재해왔던 ‘하나의 민족이 둘로 갈라설 수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꿈’에 의해 조성된 것이었다. 5·10단선 저지는 이러한 제주도민의 바램을 조직화하고 옹호한 ‘남로당제주도위원회’가 봉기 목적을 부분적으로 달성한 것이었다. 남로당은 좌파적인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을 지향했겠지만, 제주도민은 ‘통일된 민주정부’를 원했다. 이러한 염원과 지향이 배합되어 ‘미국 점령정책의 최종적 귀결이었던 5·10단독 선거’가 거부됐다.

넷째, 초기 무장대와 국방경비대와의 충돌이 없었던 이유는 미군정 및 경비대 수뇌부의 판단과 경비대와의 충돌을 회피한 무장대 지도부의 전술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경비대에 침투한 남로당 세포는 이 충돌회피 전술을 펼치는데 역할을 했다. 다만 그들이 9연대의 진압작전을 지연시키는 등의 주요 지침을 정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해 제주4·3사건 초기 상황을 중심으로 ‘무장대’의 조직과 활동을 검토하고자 했다. 그 결과 조직체계의 변동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제시했다. 하지만 아직도 무장대 관련 사료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투쟁보고서」에 수록된 국방경비대와의 관계에 대해 깊게 접근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이 내세운 ‘5·10단선 거부’가 부분적으로 실현됐음에도 무장투쟁을 멈추지 않은 이유 등도 고찰하지 못했다. 물론 본 연구가 접근하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의 무장대 연구 또한 시급하고 중요할 것이다. 많은 사료의 발굴과 더불어 다음 연구자들에 의해 제주4·3사건 당시 ‘무장대’의 실체가 드러나길 바란다.

참고문헌

1. 학위논문

문순보, 「제주민중항쟁의 원인과 성격-미군정의 대제주도정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박명립, 「제주도 4·3 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양정심, 「제주4·3항쟁에 관한 연구-남로당 제주도위원회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양한권, 「제주도 4·3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함옥금, 「제주4·3의 초토화 작전과 대량학살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허호준, 「제주4·3의 전개과정과 미군정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2. 논문

고창훈, 「4·3민중항쟁의 전개와 성격」, 『해방전후사의 인식4』, 한길사, 1989.

김종민, 「4·3이후 50년」,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서중석, 「제주4·3의 역사적 의미」,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양조훈, 「제주4·3의 역사적 조명」, 『제주도 연구』 15, 제주학회, 1988.

양정심, 「주도세력을 통해서 본 제주4·3항쟁의 배경」,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이운방, 「4·3사건의 진상」, 제주4·3연구소, 『이제사 말함수다』, 한울, 1989.

최장집, 「한국의 초기국가형성의 성격과 구조 : 1945~1948」, 『산업사회연구』, 한울, 1987.

3. 단행본

- 강준만, 『현대사 산책』, 인물과 사상사, 2004.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對非正規戰史』, 1988.
- _____, 『한국전쟁사 1권 - 해방과 건군』, 1967.
- 고성화, 『통일의 한길에서』, 창미디어, 2005.
- 高峻石, 『朝鮮 1945~1959:革命史の證言』, 1972.
- 김남식, 『南勞黨研究』, 돌베개, 1984.
- 김봉현, 김민주, 『濟州島 人民들의 4·3武裝鬪爭史』, 文友社, 1963.
- 김점곤, 『韓國戰爭과 勞動黨 戰略』, 박영사, 1973.
- 노민영 엮음, 『잠들지 않는 남도』, 온누리, 1988.
- 박서동 채록·정리, 『영원한 우리들의 아픔 4·3』, 월간관광제주, 1990.
- 이윤, 『진중일기』, 여문각, 2001.
- 제민일보 4·3특별취재반, 『4·3은 말한다』 1권·2권, 전예원, 1994.
- _____, 『4·3은 말한다 3』, 전예원, 1995.
- _____, 『4·3은 말한다 4』, 전예원, 1997.
- _____, 『4·3은 말한다 5』, 전예원, 1998.
- 제주도, 『제주도지』 1권, 1993.
- 제주4·3연구소, 『제주4·3 자료집-미군정보고서』, 제주도의회, 2000.
- _____, 『제주4·3 자료집Ⅱ- 미국무성 제주도관계문서』, 각, 2001.
- _____. 『제주항쟁』, 실천문화사, 1991.
- _____, 『이제사 말함수다』 I·II, 도서출판 한울, 1989.
- _____, 『4·3장정』 I~VI, 1990~1993.

4. 간행물·자료집

- 건국청년운동협의회, 『대한민국건국청년운동사』, 1989.
- 김익렬, 「실록유고-4·3의 진실」, 제민일보 4·3특별취재반, 『4·3은 말한다』 2권, 전예원, 1994.

남로당제주도위원회, 『3·1운동 기념투쟁의 방침』, 1947. 2. (제주4·3연구소, □□제주항쟁□□
 창간호, 실천문학사, 1991.

대검찰청, 『좌익사건실록 1권』, 1965.

문창송,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묻혀진 4·3의 진상』, 1995.

육군본부, 『공비토벌사』, 1954.

조선통신사, 『朝鮮年鑑-1948年版』, 1947.

제주도경찰국, 『제주경찰사』, 1990.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자료집1~3 신문편』, 2002.
 _____, 『제주4·3사건 자료집4 정부문서편』, 2002.
 _____, 『제주4·3사건 자료집5 군경자료편』, 2002.
 _____, 『제주4·3사건 자료집6 관보편』, 2002.
 _____, 『제주4·3사건 자료집7 미국자료편①~⑤』, 2003.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2003.

제주도, 『제주실록』, 1997.

제주도의회, 『濟州道4·3被害調査報告書-修正·補完版』, 1997.

5. 신문·잡지

『경향신문』, 『독립신보』, 『서울신문』, 『제민일보』, 『제주신보』, 『조선일보』,
 『노력인민』

6. 국외 연구논문·자료

주한미육군사령부 일일정보보고(HQ USAFIK, G-2 Periodic Report)

미육군6사단 일일정보보고(USAFIK, 6th Infantry Division G-2 Periodic Report)

7. 마을지

가시리, 『加時里誌 가스름』, 1988.

고성리, 『古城里誌』, 1993.

명월리, 『明月郷土誌』, 2003.
서홍동, 『西洪里誌 西洪爐』, 1996.
수산리, 『水山里誌』, 1994.
색달리, 『색달마을지』, 1996.
평대리, 『坪垌里誌』, 1990.
한동리, 『漢東里誌 둔지오름』, 1997.
화순리, 『和順里誌』, 2001.
화북동, 『禾北洞郷土誌』, 1991.

8. 구술자

강봉순(남, 1932년 생)

강천문(남, 1932년 생)

고복순(여, 1931년 생)

김민주(남, 1932년 생)

김원탁(남, 1930년 생)

문창송(당시 화북지서장)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국문초록

‘무장대’는 제주4·3사건의 전개과정에 한 축을 형성했다. 본 연구는 무장봉기 주체들에 의해 그들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던 거의 유일한 자료인 「제주도인민 유격대 투쟁보고서」가 사료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이 기록의 분석을 토대로 제주4·3사건 초기(1948. 3. 15~7. 24) 무장대의 조직과 활동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첫째, 소위 ‘4·15도당부대회(島黨部大會)’의 존재 여부와 성격, 둘째, ‘반미투쟁’을 무장대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담보하고 있었는가? 셋째, ‘5·10단선 거부’가 무장대(혹은 남로당)와 제주도민에게는 과연 어떠한 의미였나? 마지막으로 제주4·3사건 초기 무장대와 국방경비대 간의 관계 등을 주요하게 검토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투쟁보고서」는 어느 정도의 신뢰를 지니고 있었다. 무장대의 조직은 준비가 원활치 못했고 더디게 진행되었지만 무장봉기 이전인 1948년 3월 15일 전후로 무장부대로서 ‘유격대’를 준비했다. 급박한 무장투쟁 국면에서 도당사령부(무장대)는 초기에 잦은 조직체계 변화를 꾀했다. 더불어 유격투쟁이 본격화 되면서 군사부가 눈에 띄게 강화되고 보급과 정치·군사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초기 무장대의 활동은 그들이 내세운 목표인 “조직의 수호와 방어 그리고 5·10 단선단정(單選單政) 반대”를 위한 활동으로 집약되었고, 결국 5·10단선은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 거부되었다.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연구결과 첫째, 소위 ‘4·15도당부대회’는 확인할 수 없는 주장이고, 회합이 없었거나 혹은 일상적인 지도부회의였다. 둘째, ‘반미투쟁’은 상징적인 구호에 머물렀고, 오히려 무장대 지도부는 미군을 직접 선제공격해서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득이 없다는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무장대의 활동일지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에서 5·10단선이 거부된 것은 무장대의 위협이나 선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이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선택한 결과였다. 넷째, 초기 무장대와 국방경비대의 충돌이 없었던 것은 무장대 지도부의 전술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국방경비대에 침투한 남로당 세력은 이 ‘충돌회피’ 전술을 펼치는데 일정 정도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